

KINU 연구총서 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 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양갑용

KINU 연구총서 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양갑용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한디자인 (02-2269-9917)

ISBN 978-89-8479-692-8 9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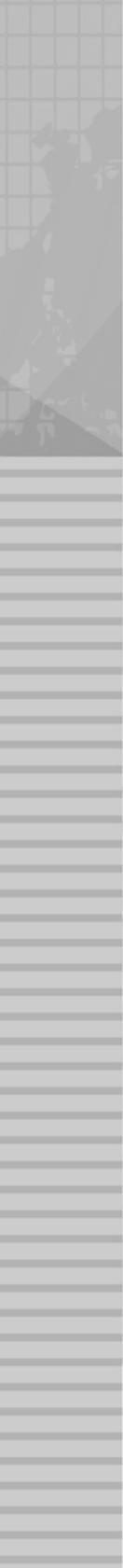
가 격 ₩6,000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요 약	v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대상과 방법	5
II.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이해	11
1. 정책연구기관의 개념 및 범주	13
2. 정책연구기관의 발전	20
3. 대외정책결정과정과 정책연구기관의 역할	31
III.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	41
1. 정책연구기관 현황	43
2. 한반도 전문가 현황	74
3. 평가와 한계	91
IV. 결론 및 과제	101
참고문헌	10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3

표 목차

KINU 연구총서 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표 II-1>	펜실베니아대학의 정책연구기관 개념과 범주 유형	16
<표 II-2>	중국의 10대 싱크탱크	29
<표 II-3>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의 구성	34
<표 III-1>	중국의 한반도 관련 주요 싱크탱크 현황	44
<표 III-2>	한반도 연구주제 추이	67
<표 III-3>	학술지별 한반도 연구주제 분포	70
<표 III-4>	북경과 동북지역의 연구주제 비교	72
<표 III-5>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 현황	74
<표 III-6>	중국내 조선족 출신 한반도 전문가 현황	80
<표 III-7>	전공별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현황	82
<표 III-8>	한반도 전문가의 연구주제 관심도	83
<표 III-9>	전문가별 논문게재 건수	85
<표 III-10>	전문가별 중앙언론기관 노출 총 횟수	88

그림 목차

<그림 Ⅲ-1> 연구주제별 비중	69
<그림 Ⅲ-2> 연구주제의 지역 간 비교	71
<그림 Ⅲ-3> 북경지역의 연구주제별 비중	72
<그림 Ⅲ-4> 동북지역의 연구주제별 비중	73
<그림 Ⅲ-5> 한반도 전문가의 성별 분포	76
<그림 Ⅲ-6> 한반도 전문가의 연령분포	77
<그림 Ⅲ-7> 한반도 전문가의 기관별 분포	78
<그림 Ⅲ-8> 한반도 전문가의 지역별 분포	79
<그림 Ⅲ-9> 한반도 전문가의 민족별 분포	80
<그림 Ⅲ-10> 한반도 전문가의 전공별 분포	81

요 약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이며 전략적인 한중 협력관계의 정립을 위해 중국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연구기관과 전문가의 현황 및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반도 관련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실증적 이해와 그 역할 및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중국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와 한중 간 1.5 트랙 및 민간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북경, 상해, 동북지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14개를 선정하였다. 즉, 중국의 10대 싱크탱크 중 한반도와 관련 있는 6개의 정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중국국제전략학회, 상해국제문제연구원 등과 10대 싱크탱크는 아니지만 최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싱크탱크 중 한반도와 관련된 4개의 정책연구기관인 개혁개방논단, 상해사회과학원, 북경대학, 청화대학,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동북지역의 4개 정책연구기관인 동북3성의 사회과학원과 길림대 동북아연구원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14개 정책연구기관의 주요 간행물인 16개 학술지에 2002년부터 2012년(4월)까지 약 10년 동안 한반도 관련 논문(총 615편)을 1편 이상 게재한 제1저자 300여 명 중 북경, 상해, 동북지역 이외의 전문가를 제외한 후, 14개 정책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과 한중 전문가의 복수 추천을 받은 연구자 총 56명을 추출해 이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10년간 게재된 한반도 관련 논문 총 615편의 주제를 한국(국내+한중관계), 북한(국내+북중관계), 한반

도(남북관계+외교안보+경협) 등 7개로 분류해 정책연구기관 및 한반도 전문가의 연구경향성 및 관심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한반도 전문가의 대중에 대한 지명도와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 등 중앙언론 매체의 출연(인터뷰, 좌담회, 기고문) 빈도를 조사해 측정하였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중국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연구기관의 개념, 발전, 역할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재하다는 측면을 제외하면 정책연구에 종사하면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국의 정책연구기관도 미국 등 일반 국가에서 규정하는 정책연구기관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관변 정책연구기관은 1949년 이후 태동기, 복원기, 형성기, 성장기를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Ⅲ장의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볼 때 중국의 주요 정책연구기관은 한반도 전문 연구부서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북경지역에 위치한 정책연구기관이 상해 및 동북지역의 정책연구기관보다 정책적 영향력 면에서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외정책에 포함된 한반도 정책 역시 의사협조기구인 외사영도소조에서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바, 이 과정에 있어 공식적, 제도적 통로가 보장된 관변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정책적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비공식적 통로를 활용하는 대학의 정책연구기관도 최근 영향력을 높이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연구기관의 간행물에 나타난 중국의 한반도 연구경향성은 북핵문제 등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한국의 국내 상황이었으며, 북중관계나 남북관계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관심은 가장 낮았다. 북경지역은 중앙정부의 입장 및 국가이익 차원에서 국제관계의 틀로 한반도 연구에 접근하는 반면, 동북지역 정책연구기관의 한반도 연구는 지방정부 입장에서의 한반도 전반에 대한 지역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북한 국내 및 북중 협력관계에 상대적으로 깊은 연구관심을 두고 있었다.

한편,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볼 때,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한족(73%)이 조선족(25%)보다 많고, 40대, 50대, 60대 순의 연령분포를 보였으며, 국제관계(40%) 전공자보다 지역연구 전공자(54%)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동북지역에는 여성, 조선족, 지역연구 전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북경지역은 국제관계 전공자와 남성 및 한족의 비중이 더 높았다. 개별적 연구관심도도 북경지역은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가장 압도적이었으며, 동북지역은 북한 국내 및 북중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관심을 보였다. 중앙매체의 출연빈도에서 나타난 한반도 전문가의 대외지명도 및 대중 영향력은 북경지역의 정책연구기관, 예를 들면 중국국제문제연구소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연구원과 대학의 교수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바, 향후 교류협력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의 정책적 영향력을 평가하고 그 한계를 제시했다.

주제어: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 한반도 연구, 정책적 영향력, 정책 결정과정, 연구경향성

Abstract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Chinese Think Tanks and Experts on the Korean Peninsula

Jun, Byoungkon & Yang, Gabyong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think tanks and their Korea experts, which have a great influence on China's policy on South Korea and its decision-making process.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es of 14 think tanks in Beijing, Shanghai and Northeast China that are focused on the issues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reviewed. Furthermore, an analysis of these think tanks' research trends, which are categorized into 7 different topics that include domestic issues in South Korea, South Korean-Chinese relations, domestic issues in North Korea, North Korean-Chinese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n nuclear issue, diplomacy and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provided. The analysis is conducted based on these think tanks' main publications in 16 academic journals, which are composed of 615 articles related to issue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2002 to 2012.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56 Korea experts, who have published articles, and analyzes their age, ethnic background, region of origin and their expertise, while their research interests are also measured in accordance to the 7 aforementioned topics of research trends. In addi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frequency of the experts' appearances in major media sources, such as the official Xinhua News Agency, the People's Daily and CCTV (China Central Television), in order to measure the experts' reputation and influence over the public.

This study evaluates policy influences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Chinese think tanks and their experts in regards to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research. It also provides future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Chinese think tanks as well as establishing a Sino-Korean 1.5 track and networking among civilian experts.

Key Words: Think Tanks, Korea Experts, Research on the Korean Peninsula, Policy Influences,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Research Trends

I. 서론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30여 년간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 수행의 결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국제사회,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 행위자로서 그 영향력 및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비중도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증대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¹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미 간 역학관계의 변화는 동북아 지역에서 점차 현실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새로 출범하는 중국의 차세대 지도부는 지속적 부상을 위한 국내통합과 함께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정 부분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향후 미중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한중관계의 설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중관계는 수교 20년 동안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북핵문제의 장기화,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북중관계의 긴밀함 속에서 2010년 발발한 천안함 사건은 한국과 중국이 2008년 합의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무색하게 하였고, 한미 동맹과 북한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극명한 시각 차이는 한중관계

¹ 이러한 논란은 중국의 부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비관론으로 대비할 수 있다. 낙관적 관점에 대해서는 Denny Roy, "China's Reaction to American Predominance," *Survival*, Vol. 45, No. 3 (Autumn 2003), pp. 57~78 참조; 반면 비관적 입장은 Wang Jisi, "China's Changing Role in Asia," Kokubun Ryosei and Wang Jisi (eds.), *The Rise of China and a Changing East Asian Order* (Tokyo: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2004), pp. 3~21 참조.

의 격상에 어려움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양국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하고 있는 한중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중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책임대국 부상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남북관계 및 통일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상호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한중 간 긴밀한 정책협력 및 조율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한중 간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공식채널을 통한 직접협상 이전에 중국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연구기관(싱크탱크)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소통 확대 및 지적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주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입장, 정책방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양국 간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을 사전에 제어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국내의 외교안보연구원, 국방연구원,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과 세종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이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 역시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한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연구대상도 한반도에 집중하지 않고 대외관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이며 전략적인 한중 협력관계의 정립을 위해 중국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연구기관과 전문가의 현황 및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반도 관련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실증적 이해를 도모하고 그 역할 및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향후 중국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와 한중 간 1.5 트랙 및 민간 전문가의 네트워킹 구축에 활용하고, 나아가 중국 정책연구기관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본고는 우선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개념, 역사,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기본적으로 이해한 후 한반도 관련 중국 정책연구기관과 전문가에 대한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현황 분석은 중국 내에서 일정한 정책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경과 상해 및 동북지역의 정책연구기관을 선정·소개하고, 정책연구기관의 대외 공개 간행물에 나타난 지역별 정책연구기관의 연구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현황 분석은 동지역의 정책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활동하는 한반도 전문가에 대해 진행하여 이들의 한반도 관련 연구논문에 나타난 연구관심도와 언론 매체 노출 조사를 통해 나타난 개인별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과 방법

가. 연구대상

본 주제와 관련된 기존연구는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분석과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된다. 정책연구기관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중국의 대외관계에 정책적 영향력이 있는 기관

을 중심으로 관변 및 민간 싱크탱크를 소개하고 있으며,² 한반도 전문가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저인망식 추출방법을 통해 전 중국에 포진한 학자를 조사하거나 일부 영향력을 갖춘 전문가만 집중 분석하고 있다.³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참고·활용하되, 정책적 접근도와 영향력은 기관 차원의 제도적 측면과 개인 차원의 연구능력 측면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정책연구기관과 한반도 전문가를 모두 분석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한반도 관련 중국의 정책연구기관과 전문가이다. 우선, 정책연구기관의 경우 정책적 영향력이 비교적 큰 북경 및 상해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하되, 대외관계 전반보다 한반도 정책과의 관련성에 집중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한반도와 지리적,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동북지역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인터넷 조사 등을 활용해 총 14개의 정책연구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즉, 중국의 10대 싱크탱크 중 한반도와 관련 있는 6개의 정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국제문제

² 대표적인 예로, 김흥규, 『중국 국제정치 분야 싱크탱크 연구: 후진타오 시기를 중심으로』(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10)의 경우,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기관의 현황을 소개하고 특징을 분석하였고, 이상국 외,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안보·국방정책 결정 메커니즘 분석』(국방정책 전문연구시리즈 2011-15)의 경우는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싱크탱크의 정책적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밖에 양갑용, “정책창출 기제로서 중국의 싱크탱크: 유형과 특징,” 은종학 편, 『현대 중국의 지식생산 구조』(서울: 도서출판 길, 2012), pp. 97~133의 경우는 정책적 기여의 측면에서 중국 싱크탱크의 위상을 평가하고 있다.

³ 윤경우, 『중국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 명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2011)는 인터넷 조사를 활용해 총 336명의 한반도전문가 명부를 작성하였다.

연구소,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중국국제전략학회, 상해국제문제연구원 등과 10대 싱크탱크는 아니지만 최근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싱크탱크 중 한반도와 관련된 4개의 정책연구기관인 개혁개방논단, 상해사회과학원, 북경대학, 청화대학,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동북지역의 4개 정책연구기관인 동북3성의 사회과학원과 길림대 동북아연구원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한반도 전문가의 경우, 한반도 관련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전문가 집단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오랫동안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료, 한반도 관련 여론을 선도하는 한국담당 기자나 특파원 등 언론인, 한반도와의 경제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인, 정책연구기관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결정 과정에 일정한 참여와 영향을 미치는 연구원, 한반도 관련 인재를 양성하면서 정책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 소속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중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는 한반도 전문가는 정책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정책연구기관과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경우 방대한 규모로 인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반감되는바, 그 범위를 북경, 상해, 동북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활발한 활동을 하는 정책연구기관 및 대학 소속 전문가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전문성의 중요한 판단근거인 한반도 관련 연구논문 발표를 주요 기준으로 삼되, 보완적으로 전문가의 추천이나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총 56명의 한반도 전문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14개 정책연구기관의 주요 간행물인 16개 학술지에 2002년부터 2012년(4월)까지 약 10년 동안 한반도 관련 논문(총

I
II
III
IV

615편)을 1편 이상 게재한 제1저자 300여 명 중 북경, 상해, 동북지역 이외의 전문가를 제외한 후 14개 정책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과 한중 전문가의 복수 추천을 받은 연구자 총 56명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문분야의 전문가를 제외하였고, 사회과학분야 내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직접적이 아닌 국제관계 및 질서의 큰 틀에서 간접적으로 다룬 논문의 저자를 부득이 제외하였다.⁴

나.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과 전문가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태적인 문헌분석과 함께 양적 조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 조사(Qualitative Research)를 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현황 분석을 위해 문헌연구와 인터넷의 기관 홈페이지, 중국의 바이두닷컴(www.baidu.com)과 신화망(www.xinhuanet.com), CNKI 검색엔진 사이트(www.cnki.net) 및 세계적인 포털사이트인 구글(www.google.com) 등에 공개된 정보 및 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정책연구기관과 전문가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CNKI 검색엔진 사이트를 이용해 14개 정책연구기관의 주요 대외 간행물인 16개의 학술지에 10년간 게재된 한반도 관련 논문을 수집·조사

⁴ 그런 점에서 이들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를 대표한다고 단언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제한된 지면과 지역, 연구 분야로 인해 중국 내에서 한반도 관련 정책적 영향력과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연구기관의 한반도 연구경향성 파악과 한반도 전문가의 추출 및 개별 연구관심도를 측정하는데 활용하였다. 즉, 10년간 게재된 한반도 관련 논문 총 615편의 주제를 한국(국내+한중관계), 북한(국내+북중관계), 한반도(남북관계+외교안보+경협) 등 7개로 분류해 정책연구기관 및 한반도 전문가의 연구경향성 및 관심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한반도 전문가의 대중에 대한 지명도와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 등 중앙언론 매체의 홈페이지와 뉴스 검색엔진인 Panguso(www.panguso.com)와 CNKI의 신문검색(www.cnki.net) 기능을 활용해 출연(인터뷰, 좌담회, 기고문) 빈도를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이상의 정태적 연구와 계량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지연구(Field Research)와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도입하였다. 현지 조사의 경우, 중국 내 주요 싱크탱크의 지역별/기관별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요 정책연구기관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심층면접을 실시해 공개된 자료 이외의 정보를 파악·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밖에 본 주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오류를 시정하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 관련 국내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해 반영하였다.⁵

⁵ 다만 본 연구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활용, 반영하였고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II.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이해

1. 정책연구기관의 개념 및 범주

일반적으로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수는 매우 많고 그 역할 또한 매우 다양하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이 발표한 <The Global Go To Think Tanks Report 2011>에 의하면 전세계 싱크탱크는 2011년 말 현재 6,545개이다.⁶ 이렇게 많은 수만큼 이른바 정책연구기관의 개념 역시 여러가지이다. 원래 정책연구기관(싱크탱크, Think Tanks)이란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전략과 작전계획을 논의하는 안전한 공간을 의미하는 군사용어였다.⁷ 제2차 대전 이후 싱크탱크의 개념은 군수기업의 연구개발부나 랜드(RAND) 연구소와 같은 외부계약기관을 지칭하는 의미로 확장되었고, 1960년대 이후 현재와 같은 의미의 전문용어로 통용되기 시작했다.⁸

일반적 의미에서 통용되는 정책연구기관은 정부정책과 독립된 위치에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정책과정에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와 지식을 제공하는 기관과 그 구성원을 지칭한다. 즉, 상대적으로 안정되며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공공정책연구와 자문기구를 의미한다.⁹ 특히, 싱크탱크의 개념을 규정하는 중요 요건으로 거론되는 것은 정책연구에 종사, 정부의 정책결정에 기여, 비영리성, 독립성

6- James G. McGann, “The Global Go To Think Tanks Report 2011,” pp. 16~17 <http://repository.upenn.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5&context=think_tanks> (검색일 2012.9.7); 劉穎, “近年來美國智庫的當代中國研究狀況,” 『理論月報』, 第5期(2012), p. 182.

7- 王莉麗, “美國公共外交中的智庫的功能與角色,” 『現代國際關係』, 第1期(2012), p. 39.

8- 陳雙梅, “智庫建設的困境擺脫與國家軟實力提勝,” 『重慶社會科學』, 第95期(總第210期)(2012), p. 93.

9- 楊玉良, “大學智庫的使命,” 『復旦學報(社會科學版)』, 第1期(2012), pp. 1~2.

등이다. 이를 감안하면, 정책연구기관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문성 및 아이디어를 생산하며 또 그에 의존하는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인 연구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¹⁰

정책연구에 종사하면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중국의 정책연구기관도 미국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책연구기관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정책연구기관 간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정책연구기관의 비영리성과 독립성에 있다. 중국에서 국가로부터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정책연구기관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정책연구기관은 ‘전문가, 학자, 그리고 지식인으로 구성된 연구기구’이며 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사상관점과 가치목표를 제공하고 여론과 사회를 이끈다. 아울러 정부정책결정에 전문가 참모로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학자들이 만들어낸 연구 성과를 정부정책으로 바꾸기도 한다. 또한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정치(政治)와 학술(學術)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사회 의견과 요구를 수시로 반영하고 전달하는 이익전달자의 역할을 한다. 중국에서 대체로 “즈쿠”(智庫) 혹은 “스상쿠”(思想庫)라 불리는 정책연구기관은 대부분 관변 조직의 정책기구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정부나 정부 정책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민간형 정책연구기관의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¹¹

¹⁰- Andrew Rich,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11.

¹¹- 李安方·王曉娟·張屹峰·沈桂龍, 『中國智庫競爭力建設方略』(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0), p. 1.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기관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단위 법인형(事業單位法人型)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법인 조건을 갖춘 사업단위 가운데 전문적으로 정책연구와 자문에 종사하는 기구이다. 예를 들어 국무원발전연구센터(國務院發展研究中心),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科院)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기업형(企業型)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공상행정부문에 등기한 정책문제 자문기구이다. 영점조사공사(零點調查公司, Horizon Research)가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 민영비기업단위 법인형(民辦非企業單位法人型)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전문적으로 정책연구와 자문에 종사하는 민영 비기업단위 법인이다. 대표적으로 천칙경제연구소(天則經濟研究所)가 있다. 넷째, 대학 부속형(大學下屬型) 정책연구기관이다. 대학에 소속되어 정책연구와 자문에 종사하는 조직으로서, 청화대학 공공관리학원(清華大學公共管理學院)의 국정연구센터(國情研究中心)와 북경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北京大學中國經濟研究中心) 등이 대표적이다.¹²

그러나 이러한 분류 역시 자율성과 독립성을 배제한 분류로써 그 의미가 매우 제한적이다.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펜실베니아대학 정책연구기관 연구팀은 “자율성”에 가중치를 두어 독립적인 정책연구기관, 준독립적인 정책연구기관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¹³ 또한, 자율성에 기반한 분류를 모든 정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시도한 것이 아니라 소속에 따른 분류도 시도하였다. 예를 들

12. 양갑용, “중국싱크탱크의 유형과 특징,” 『한중사회과학연구』, 제9권 제3호 (한중사회과학학회, 2011), p. 100.

13. James G. McGann, “The Global Go-To Think Tanks,” <<http://www.fpri.org/research/thinktanks/GlobalGoToThinkTanks2010.pdf>>.



어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정책연구센터는 대학 소속형(University Affiliated) 정책연구기관으로 분류하고, 공식적으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책연구기관은 정당 소속형(Political Party Affiliated) 정책연구기관으로, 그리고 정부 공식기구에 소속된 정책연구기관은 정부소속형(Government Affiliated) 정책연구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오로지 정부와 승인(Grants), 그리고 계약(Contracts)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지만 공식 정부조직이 아닌 정책연구기관은 준정부형(Quasi Governmental) 정책연구기관으로 분류하였다.

● 표 II-1 펜실베니아대학의 정책연구기관 개념과 범주 유형

범주(Category)	개념정의(Definition)
1)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연구기관 (Autonomous and Independent)	어떠한 이익집단이나 혹은 기부자로부터 현저하게 독립적이고 정부로부터 활동과 재정에 있어서 자율적(Autonomous)임
2) 준독립적인 정책연구기관 (Quasi Independent)	정부로부터 자율적이거나 이익집단(예를 들어 조합, 종교 단체 등), 기부자 혹은 계약 관계에 있는 기관이 펀딩(Funding)의 대부분을 제공하여 정책연구기관의 활동에 현저한 영향력을 가짐
3) 대학소속형 정책연구기관 (University Affiliated)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정책연구센터
4) 정당소속형 정책연구기관 (Political Party Affiliated)	정당에 공식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정책연구센터
5) 정부소속형 정책연구기관 (Government Affiliated)	정부 공식 구조의 일원으로 편재
6) 준정부형 정책연구기관 (Quasi Government)	오로지 정부와의 승인(Grants)과 계약(Contracts)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지만 공식적인 정부조직은 아님

출처: James G. McGann, "The Global Go-To Think Tanks," p. 63 <<http://www.fpri.org/research/thinktanks/GlobalGoToThinkTanks2010.pdf>>.

결국 중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정책연구기관 분류와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이 착안하고 있는 정책연구기관 분류 기준의 가장 큰 차이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연구기관인가 아니면 준독립적인 정책연구기관인가라는 것이다. 그 기준에 따르면 바로 어떠한 이익집단이나 혹은 기부자로부터 현저하게 독립적이고 정부로부터 활동과 재정에 있어서 자율적(Autonomous)인 조직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Autonomous and Independent) 정책연구기관이며, 정부로부터 자율적이거나 이익집단(예를 들어 조합, 종교단체 등), 기부자 혹은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이 재정(Funding)의 대부분을 제공하여 정책연구기관의 활동에 현저한 영향력을 가진 정책연구기관을 준독립적(Quasi Independent) 정책연구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다.¹⁴

따라서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을 분류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유형의 정책연구기관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¹⁵ 정책연구기관을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기구나 사람으로 정의할 경우 그 숫자는 대단히 많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중국의 정책연구기관 유형을 분류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독립성과 자율성에 따라 독립형 정책연구기관, 종속형 정책연구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고, 소속 형태에 따라 기업형, 정부형, 정당형, 대학형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 단위에 따라 부급(部級) 정책

I
II
III
IV

14. 양갑용, “정책창출기제로서 중국의 싱크탱크: 유형과 특징,” 은종학 엮음, 『현대 중국의 지식생산 구조』 (서울: 도서출판 길, 2012), pp. 103~105.

15. 천썩메이의 경우 중국의 주요 정책연구기관을 성격에 따라 관방, 반관방, 민간학회와 기금회, 대학 부속형 등 네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 陳雙梅, “智庫建設的困境擺脫與國家軟實力提勝,” 『重慶社會科學』, 第95期(總第210期) (2012), p. 93.

연구기관, 국급(局級) 정책연구기관, 처급(處級) 정책연구기관으로 분류 할 수도 있다.¹⁶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대부분 국가 공식 기구인 당·정·군 행정계통 부문에 편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은 중앙군사위 산하에, 중앙당교는 당중앙위원회에, 그리고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국무원에 편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국가기구의 모든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정책연구기관이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편의상 소속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지만 해당되는 정책연구기관이 많기 때문에 역시 적실성이 부족하다. 또한, 당·정·군 주요 국가기구 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각 해당 부문에도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혹은 기구들이 편제되어 있다. 이들도 정책 생산에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정책연구기관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국가기구 뿐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는 국무원 각급 부서에도 정책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이른바 정책연구기관이 존재한다. 국무원은 2012년 1월 현재 27개 부와 위원회, 1개 직속 특설기구, 4개 관사기구, 14개 직속사업단위, 16개 부·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원 산하 행정부문이 총 78개 존재한다.¹⁷ 이들 78개 부문 모두 정책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정책연구실이나 연구센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외교부에는 중국국제문제연구소가 있고, 국가안전부 산하에는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이 있다.¹⁸

¹⁶ 양갑용, “중국싱크탱크의 유형과 특징,” p. 101.

¹⁷ Radio Press, *CHINA DIRECTORY* (神奈川: Radio Press, Inc., 2009), p. 39.

¹⁸ 양갑용, “정책창출 기제로서 중국의 싱크탱크: 유형과 특징,” pp. 107~109.

이를 모두 정책연구기관으로 간주할 경우 중앙정부와 조직원리가 유사한 여러 지방 행정단위 역시 광의의 정책연구기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행정 조직도를 보면 성급 행정단위 즉, 직할시와 성에는 사회과학원이라는 정책연구기관이 존재한다.¹⁹ 그리고 각급 행정부문의 조직 기구도를 보면 산하에 여러 정책 기능을 가진 기구를 거느리고 있다. 성급 행정단위 뿐만 아니라 성급 행정단위 각 부문에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정책연구기관 형 조직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부 행정부문에 편제되어 있거나 정부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정책연구기관 외에 대학에도 정책연구기관이 존재한다. 전국 120여 개 중점 대학 가운데 정책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소나 연구센터가 적지 않다. 특히, 많은 기구나 인사가 이 곳 대학 내에 포진하여 국가나 정부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정책조언에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중앙 부서나 지방 행정 단위별로 산하에 대학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대학 역시 소속 부문의 요구에 따라 정책 아이디어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책지식 창출기제로서 그 개념을 한정하고 범주화한다면,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행정체제 내에 존재하는 정책기구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성격을 갖는 대학 연구소도 같은 범주로 포괄할 수 있다.

¹⁹ 국무원 직속 중국사회과학원의 경우 조직 자체가 중요 정책연구기관이면서 조직 내부에 다시 50여 개 연구소와 260여 개 연구실을 거느린 행정조직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중첩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鄒文光, “我國政府決策中的思想庫建設研究,” (華南理工大學 碩士論文, 2010), p. 14.

I
II
III
IV

2. 정책연구기관의 발전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책 조언자를 양사(養士), 모사(謀士), 책사(策士), 군사(軍師) 등으로 부르며 그 역할을 중시해왔으나, 현대적 의미의 싱크탱크가 출현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 이후부터이다. 1949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의 정책연구기관, 특히 대외관계 분야의 정책연구기관들은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발전해왔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태동기, 복원기, 형성기, 성장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태동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이후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전까지로서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에 해당하며, 복원기는 개혁개방 이후 1992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성립 이전까지이고, 형성기는 2001년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로서 각각 덩샤오핑(鄧小平)과 장쩌민(江澤民) 시기와 중첩된다. 마지막으로 성장기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로서 대체로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에 해당한다.

가. 태동기

중국에서 정책연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더불어 탄생하였다. 당시 사회주의 중국의 최대 과제는 새로운 국가의 건립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현이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권의 국가들과 경쟁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 중국은 종합적인 정책연구기구인 중국과학원(CAS)을 설립한다. 이 기구는 후일 중국공정원, 중국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으로 분화된다. 소련을 모델로 국가를 건립하던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을 선언

한 1956년부터 정책연구기관을 본격적으로 창설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1956년 국가계획위원회에 자본주의권의 경제발전을 연구하는 ‘세계경제국’을 설치했고, 중국과학원 철학사회과학 부문에 경제연구소도 설립했다. 특히, 대외정책과 관련한 정책연구 기관으로서 외교부 산하에 현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전신인 국제관계연구소를 건립했다.²⁰ 이어 1961년 중국이 제3세계권에서 소련과 외교경쟁을 시작하면서 중국국제연락부 주도하에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를 설립했다. 1963년에는 소련·동유럽연구소 및 라틴아메리카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이들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국제관계 연구부문에 소속되었다가 2년 후에 연구소로 그 지위를 격상시킨 것이 현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전신이다.²¹

같은 해 중국과학원 산하에 세계경제연구소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세계정치연구실을 운용하였다. 1964년에는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귀국한 후 국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 및 학과의 설치를 지시했다. 이 때 건립된 외교학원과 제1외국어학원은 중국 외교부와 신화사의 인재들을 양성, 훈련시켰고 국제관계학원은 조사부와 신화사의 비밀 정보요원의 훈련을 맡았다. 이밖에 북경대학, 인민대학, 복단대학에 국제정치 관련 학과들을 설치하기도 했다.²²

그러나 뒤이어 마오쩌둥이 계속혁명론에 입각해 발동한 문화대

²⁰- David Shambaugh,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ink Tanks: Evolving Structure and Process,” *The China Quarterly*, Vol. 171 (September 2002), pp. 575~576.

²¹- Li Zong et al., “Xin Zhongguo guoji wenti yanjiu 50 nian,”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eds.), *Xin Zhongguo shehui kexue 50 nian* (Beijing: China Social Science Press, 2002), p. 611.

²²- *Ibid.*, p. 612.

혁명은 정책연구기관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문혁기 10년 동안 중국은 마오쩌둥의 사상과 혁명 및 당성을 중시하였고, 마오쩌둥 개인에 고도로 집중된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면서 국가기관과 업무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외교부의 운용이 불가능해졌고 국제관계 관련 연구소와 대학들의 기능도 모두 마비되었다.

다만, 당시 최고지도자와 당 중앙위원회의 정보기구 역할을 담당했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만이 유일하게 유지·운용되었는데 이 기관은 미국의 중국정책, 소련의 침략 위협, 키신저와 닉슨의 방중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1973년에 외교부도 국제관계연구소를 정식으로 운용하는 등 점차 문혁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국가건립 당시 창설된 주요 정책연구기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책연구기관은 1978년까지 본연의 기능이 마비된 채 대내외 정보와 자료를 수집·정리하거나 정치선전 논리개발에 동원되는 등 제한적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다.²⁴

나. 복원기

문화대혁명기 기능이 마비되었던 정책연구기관들은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는 노선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복원되기 시작했다. 특히, 덩샤오핑을 위시한 개혁 지도부는 현대화로 국가목표를 수정하고 이데올로기와 개인 지배체제로부

²³ *Ibid.*, p. 626.

²⁴ 특히, 문혁기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정책생산과 확산이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마오쩌둥의 정책선전에 동원되거나 폐쇄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傅廣宛·劉曉永·毛志凌, “我國政府決策機制的變遷與思想庫的發展,” 『當代世界與社會主義』, 第1期 (2011), pp. 131~132 참조.

터의 탈피를 시도하는 한편, 그동안 파괴되었던 국가기관의 부활과 집단지도체제의 확립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복원기 중국의 정책연구기관들은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사고로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혁개방기 중국은 당-국가체제와 전문성에 바탕을 둔 관료체계가 복원되기 시작하였고 정책연구기관도 관료체계 내로 복원되거나 재배치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980년대 초 국무원에 4개의 연구센터(국무원경제연구센터, 국무원기술경제연구센터, 국무원가격연구센터, 국무원농촌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한 후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및 중국농촌발전문제연구소도 추가로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연구기관을 만들기 시작했다.²⁵ 아울러 그동안 중국과학원에 소속되어 있던 인문사회과학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중국사회과학원(CASS)을 설립함으로써 연구부문, 연구인력, 자원면에서 오늘날의 중국을 대표할만한 거대한 정책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기초를 만들었다. 그리고 기존의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에는 군사정책 결정을 자문하는 성격을 부여하였고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중앙위원회 외사판공실과 국가안전부의 공동 관리하에 둬으로써 정보분석과 정책생산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러한 독립되고 전문적인 정책연구기관의 설립은 전 영역으로 확산되어 중앙정부의 각 부문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설립되었다.²⁶ 한 통계에 의하면 1985

25. 趙志耘·楊朝峰, “中美思想庫比較研究,” 『中國軟科學』, 第7期 (2011), p. 21.

26. 중국의 지방정부 정책연구기구와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 國務院發展研究中心人力資源研究培訓中心, “地方政府政策研究機構及人才隊伍

I
II
III
IV

년까지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830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정책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 연구자도 26,500명으로 증가하였다.²⁷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신사고와 전문성을 갖춘 지식인을 중시하고 중용하는 정책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당시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역할이 저평가되거나 제한되었던 전문가들이 정책연구기관의 복원과 함께 복귀하였고 폐쇄되었던 대학이 다시 신입생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복귀하거나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정책연구기관의 부활과 원상회복에 기여할 수 있었다.

더욱이 제한적이고 단계적이긴 하나 개혁개방의 영향으로 외부 세계와의 접촉과 교류도 증가함에 따라 1980년대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개선되었다. 또한 전문가 층의 확충과 연구토론 공간의 확대로 연구기관 간의 경쟁도 증가하였다.²⁸ 아울러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의 이념적 교조에 따른 연구에서 벗어나 비교적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시도됨으로써 연구 성과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중국 특색을 강조하면서 중국적 관점과 이론에 의거해 국제관계를 분석하려는 경향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다. 게다가 경직된 관료체계와 개혁을 둘러싼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쟁 및 정치적 갈등은 정책연구기관의 제도적 활용이나 자발적 역할 증대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정책연구기관들은 소수 명망가

狀況調査, 『調査研究報告』, 第12號(總3767號) (2011), pp. 1~20.

²⁷- Na Mi, "Exploring the Political Roles of chinese Think Tanks: A Case Study of China's Three Gorges Project Decision-Making," (M.A. dissertation, The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2008), p. 14; 이문기, "중국싱크탱크의 현황과 역할 변천 연구,"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국내학술대회(2012년 2월 17일), p. 6에서 재인용.

²⁸- David Shambaugh,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ink tank," pp. 575~576.

중심의 정책전문가들을 통해서 개혁에 대한 의제를 유통하는 비공식적인 관계망이 형성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정책연구기관이라는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서 정책이 유통되는 구조가 아니라 관계망이라는 비공식 채널이 작동하는 구조로서 이전과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정책연구기관의 복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다. 형성기

천안문 사건으로 촉발된 사회적 위축과 전망의 부재 속에서 중국의 개혁지도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2년 초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덩샤오핑은 남순강화를 통해 계획경제 대 시장경제,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대립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는 1992년 10월 14차 당 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건설을 공식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새로운 시도는 중국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의 각 분야별 영역과 단위에서 이에 대비한 합당한 정책결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지배와 사회주의의 틀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따라 중국은 정책연구기관을 새로 창설하는 한편, 정책연구기관의 효용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지원과 개혁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4년에 창설된 ‘중국개혁개방

논단(中國改革開放論壇)’이다. ‘중국개혁개방논단’은 개혁개방의 심화,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당의 산하 기구이다. 특히, 개혁개방논단은 중당당교의 대외 협력창구일 뿐만 아니라 중공중앙 대외연락부의 공식적인 대외 협력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²⁹ 후일 산하에 한반도 관련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학술기구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개혁개방논단도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또한, 중국은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책 참여가 이루어지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연구기관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지식인을 정책부문에 진입시키거나 일부 이론 간부들을 정책연구 부문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들이 중앙의 정책결정 및 자문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이로써 현재의 중앙정책연구실과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정책자문기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³⁰

아울러 중국은 1993년과 1998년 국무원과 교육부가 세계 일류대학을 만들려는 야심찬 ‘2·11공정’과 ‘985공정’을 추진했는데,³¹ 이의 영향으로 중국의 국내 중점대학들이 앞 다투어 정책연구와 자문기

²⁹- 2011년 1월에 진행한 개혁개방 논단 관계자와의 인터뷰.

³⁰- 林祐瑄, “當前中國智庫發展要況述評,” 『中共研究』, 43卷 10期 (2009.10), p. 82.

³¹- 2·11공정은 1993년 중국 교육부가 제기한 대학교육 중점건설 프로젝트이다. 목표는 21세기에 직면해 10년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을 거쳐 100개 정도의 대학교와 학과를 중점 건설함으로써 대학교와 학과가 고급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경제건설과 과학기술발전을 해결하는 기지로 삼는 것이다. 985공정은 1998년 5월 4일, 장쩌민이 북경대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한 21세기를 향한 중국 대학교육 진흥을 위한 행동계획을 지칭한다.

구를 설립하고 각 분야의 인재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정책문제 연구를 통해 정부부문에 연구 성과를 보고하거나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정책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출국한 유학생들이 대규모로 귀국(海歸派)함에 따라 이 시기의 정책연구기관들은 질적, 양적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해외에서 돌아온 대규모 유학 인력들이 대부분 대학에 포진하게 되면서 반관반민 성격의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과 중요도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이들은 대학 내 주요 정책연구기관(연구소나 연구실, 연구중심 등)에 들어가서 연구에 매진하면서 자신들의 정책 공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정책연구집단을 구성하기도 하며 다양한 학술 활동과 정책지원 활동을 수행하면서 비관방 정책연구기구들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모두 2,500여 개, 전문연구인력은 3만 5천 명, 관련 종사자는 27만 명이며, 이 중 철학, 언어, 문학 등을 제외한 정책연구기관은 약 2,000여 개로서 중국은 이 시기에 정책연구기관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유한 국가로 성장했다.³² 이와 같은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패러다임의 변환에 걸맞은 질적인 변화도 이루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의 정책연구기관은 관방 및 대학 정책연구기관들이 조직 및 체계, 전문성을 중심으로 내실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³²- James G. McGann, "The Global Go-To Think Tanks," <http://www.foreignpolicy.com/files/2008_Global_Go_To_Think_Tanks.pdf> (검색일: 2012.8.18).

I
II
III
IV

라. 성장기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2011년 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중국 경제가 글로벌 표준을 지향하는 본격적인 개방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의 규정과 룰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국내적 모순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에 직면함을 의미하기도 했다. 게다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외적 도전과 과제들도 동시에 증가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지도부도 이전보다 더욱 전문화되고 국제화된 정책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지도부는 중국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4년 1월 중국 역사상 최초로 당 중앙의 명의로 정책연구기관의 중요성을 직접 표명하였다. “철학·사회과학의 발전과 학과체계, 학술관점, 연구방법의 혁신을 추진하고 철학·사회과학계는 당과 정부 업무의 정책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5월 후진타오는 중앙정치국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사회과학원의 업무회보를 청취하고 사회과학원을 가일층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³³

특히, 2006년 11월 7일, 북경에서 중국태평양학회, 중국사회과학원, 상해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제1회 중국 정책연구기관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중국 최초로 ‘중국의 10대 정책연구기관’을

³³ -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9-01/31/content_10739332.htm> (검색일: 2012.8.19).

발표하였다. 이른바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국제화와 표준화를 제시한 것이다. 이후 중국의 정책연구기관들은 수동적 역할에서 탈피해 자주적·경쟁적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³⁴

● 표 II-2 중국의 10대 싱크탱크

이름	소속/관리	분야	소재	설립
中國社會科學院(CASS)	국무원	종합	북경	1977
國務院發展研究中心(DRC)	국무원	경제종합	북경	1881
中國科學院(CAS)	국무원	과학기술	북경	1949
中國軍事科學院(AMS)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사안보	북경	1958
中國國際問題研究所(CIIS)	외교부	국제관계	북경	1956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CICIR)	국가안전부	국가안보	북경	1980
中國太平洋經濟合作全國委員會(CNCPEC)	외교부	대외경제	북경	1987
中國科學技術協會(CAST)	중앙서기처 관리	과학기술	북경	1958
中國國際戰略學會(CISA)	총참모부	국제전략	북경	1979
上海國際問題研究院(SIIS)	외교부/상해시	국제관계	상해	1960

출처: <<http://news.sina.com.cn/o/2006-11-10/094210462854s.shtml>> (검색일: 2012. 9.27), 10대 싱크탱크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 작성.

또한, 2009년 3월 20일에는 중국 최고위급 전직 관료와 학자들로 구성된 매머드급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國國際經濟交流中心)를 만든 후, 2011년 6월 25일 두 번째로 “글로벌 싱크탱크 포럼”을

34. 『人民日報』, 2006年 11月 17日.

북경에서 개최하였다.³⁵ 이 회의에는 100여 명의 중국 국내외 전문가와 1,0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했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글로벌 싱크탱크 포럼이 중국 주도로 중국에서 열렸다는 점은 2009년 3월 “국제경제센터”(國經中心)가 만들어진 이후 중국의 정책연구기관과 정책연구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는 현재 중국 최고위급 정책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다.³⁶

아울러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글로벌 표준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형적 성장만이 아니라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과학화와 민주화를 더욱 강조하였다.³⁷ 고위급 관료들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파견이나 유학 등을 통한 국제감각과 학술적 훈련도 증대된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 확대하였다. 특히, 분절된 정책 지향이 아닌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 생산 위주로 방향성을 바꿔서 세계와 경쟁하는 정책연구기관의 미래 모습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이제 막 성장기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정책결정과과정에서의 정책적 영향력의 제고는 물론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35- 宏觀經濟管理編輯部, “第二屆全球智庫峰會在京舉行,” 『宏觀經濟管理』, 第7期 (2011), p. 23. 이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공동책임”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세계경제 형세와 통화팽창, 국제통화기금체제 개혁 등 글로벌 경제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36- 劉寧, “智庫的歷史演進, 基本特征及走向,” 『重慶社會科學』, 第3期(總第208期) (2012), p. 106.

37- 朱四海, “全球經濟治理與中國現代智庫的責任,” 『發展研究』, 第2期 (2012), p. 25.

3. 대외정책결정과정과 정책연구기관의 역할

중국의 정책연구기관과 정책연구자들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정책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수준, 즉 정책 영향력(Policy Influence)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³⁸ 과거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은 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정책 논리를 개발하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정책연구기관들은 당과 정부 정책의 일방적 옹호나 선전 논리 개발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정책연구기관들과 정책연구자들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는 것을 반영한다. 중국 지도부도 ‘정치국 집단 학습’을 정례화하는 등 정책 추진 통로로만 인식하고 있던 정책연구기관과 정책연구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³⁹ 높은 지적 수준이 요구되는 정책일수록 당과 정부의 정책결정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참여 경로 또한 점차 제도화되고 있고 그 역할을 이른바 정책연구기관이라 불리는 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다.

³⁸- Zhu Xufeng, “The Influence Of Think Tanks In The Chinese Policy Process,” *Asian Survey*, Vol. XLIX, No. 2 (March/April 2009), pp. 333~357.

³⁹- 정치국 집단학습은 특이 사항이 없는 한 보통 40일 간격으로 중남해(中南海)에서 열린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정치국 집단학습은 16차 당대회 기간 44차례가 열렸으며 17차 들어서도 2012년 5월말 현재 33회가 개최되었다. 정치국 집체학습에는 다양한 방면의 주요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2011년 8월 15일 기준 해당 분야 전문가 142명이 정치국 집단학습에 강사로 참여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의 대표적인 정책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이다. 142명 전문가 가운데 중국사회과학원 24명, 국무원발전연구센터 11명, 중국인민대학 10명,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8명,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8명, 중앙당교 7명, 중앙당사 연구실 6명 등이 정치국 집단학습에 강사로 참가하였다.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과거와 달리 자료 취득과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개혁개방 시기에도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은 암상자(Black Box)라 불릴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 기제, 과정, 주요 행위자 등이 불명확하고 불확실하여 검증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의 예전처럼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은 과거와 달리 집단 간, 행위자 간 협력과 갈등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적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연구기관의 참여 통로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⁴⁰ 이는 과거 상층에서 결정된 정책에 대한 대내외 선전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고 전파하는 피동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었던 정책연구기관의 조직 위상이 정책생산과 자문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정책생산에 있어서 직접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구조이다. 정책연구기관은 정책결정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정책결정, 특히 대외정책 등 국가 안위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대부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이 제도화되어 있는 중국의 시스템 상 최종결정권은 정치국상무위원회에 있다 하

⁴⁰ 이에 대해서는 양갑용, “중국 외교정책 생산기제와 싱크탱크-조어도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52권 (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2011), pp. 401~403.

더라도, 정책 과정에는 다양한 정책연구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구조를 장기간 안착시켜오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가 바로 의사협조기구의 존재이다.

심각한 주권문제나 영토문제,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아닌 경우 대부분 의사협조기구인 외사영도소조에서 논의되고 그 결과만 정치국상무위원회에 보고되거나 사후 추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예컨대 중국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의 소재가 대만문제든, 조어도(釣魚島) 문제든, 아니면 북한 핵문제든, 중국의 대외정책은 이른바 외사영도소조(外事領導小組)라는 당, 정, 군을 아우르는 의사협조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⁴¹ 또한, 영화나 신문, 방송 등 이른바 문화산업정책은 중앙선전부와 문화부, 신문출판총서, 전문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문화산업영도소조(文化產業領導小組)가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결정 과정에서 활약하는 중요한 의사협조기구는 바로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 이하 외사영도소조)이다. 외사영도소조에는 당·정·군 정책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한 각각적인 분석과 평가, 결정을 만들어낸다. 형식적으로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보고, 결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사영도소조 책임자가 후진타오이기 때문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은 사후 추인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⁴¹ 양갑용, “중국 외교정책 생산기제와 싱크탱크-조어도문제를 중심으로,” pp. 401~428.

● 표 II-3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의 구성

(2012년 6월 현재)

이름	지위	소속	직위
후진타오(胡錦濤)	조장	당, 정, 군	당총서기, 국가주석,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習近平)	부조장	당, 정, 군	정치국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국가부주석
류윈산(劉云山)	조원	당	정치국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선전부장
량광례(梁光烈)	조원	당, 정, 군	당중앙군사위원, 국무위원, 국방부장
멍젠주(孟建柱)	조원	정	국무위원,公安부장
다이빙궈(戴秉國)	조원	정	외교 담당 국무위원, 당중앙 외사판공실 주임
라오훤(廖暉)	조원	정, 정협	전국정협 부주석,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
양제츠(楊潔篪)	조원	정	외교부장
왕이(王毅)	조원	당	중앙대만판공실 주임
차오종화이(喬宗淮)	조원	당, 정	외교부 부부장, 중앙기울검사위원
왕자루이(王家瑞)	조원	당	중앙대외연락부장
왕첸(王晨)	조원	당, 정	중앙대외선전판공실, 국무원신문판공실 주임
경휘창(耿惠昌)	조원	정	국가안전부장
천더밍(陳德銘)	조원	정	상무부장
리하이펑(李海峰)	조원	정	국무원 화교사무 판공실 주임
마샤오텐(馬曉天)	조원	군	중국인민해방군 부참모장

출처: <<http://baike.baidu.com/view/1799376.htm>> (검색일: 2012.9.27).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사영도소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당, 정, 군 핵심 부서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선

전 책임자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물리력 기반인公安부와 국가안전부 관계자도 참여하고 있다. 외사영도소조는 외사판공실이 라는 행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사영도소조의 전체 업무는 판공실 주임이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다. 현 외사판공실 주임은 대북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파이빙귀 국무위원이 맡고 있다.

합의와 의견수렴을 강조하는 중국의 정책결정 특성상 외사영도소조에서 논의되는 주요 의제는 해당 소조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문의 사전 논의를 거치거나 조율을 거쳐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중국공산당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룰 경우 당 공식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 당중앙군사위원회 사전 논의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당중앙정책연구실이나 각 부문 정책연구기관, 혹은 정책연구실에서 사전 논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해당 부문에서 조정하고 취합하여 중앙서기처를 통해 외사판공실로 보낸다.

국무원도 마찬가지로 외교부, 국가안전부, 국가해양국, 상무부 등 한반도 관련 문제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요 부문의 의견을 국무원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중국사회과학원 등 공식 정책연구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그 후 국무원 상무위원회회의나 전체회의를 통해 국무원 안으로 만들어져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거쳐 외사판공실에 보고된다. 사회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국무원 판공실이나 중앙선전부 등에서 관련 정책연구기관을 통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관련 의견을 조율한 후, 이를 외사영도소조에 참여하는 국무원 신문판공실이나 중앙선전부 관계자를 통해 외사판공실에 보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군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논



의하게 되는데 이 때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등 군 관련 정책 연구기관의 사전 논의나 의견 제시를 받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책결정의 매 환절에서 정책연구기관이나 정책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정책결정과정을 보면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구조 변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다원화되고 제도화되어 있으며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⁴² 먼저 대한반도 정책결정기관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외교 사안을 다루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중앙당교의 개혁개방논단, 국무원 직속의 중국사회과학원, 외교부 산하의 중국국제문제연구소와 상해국제문제연구원, 국가안전부 산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인민해방군 산하 군사과학원과 국방대학, 민간단체인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대학 내 정책연구기관, 행정기관 산하 정책연구실 등 다양한 정책연구기관들이 한반도 정책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정책연구기관과 정책전문가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학력을 보유한 정규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들로 구성되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과거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주요 전문가들의 인적 구성이 주로 인문학에 기반하거나 지역연구차원에서 한반도를 다루는 연구자들에서 한반도를 국제관계에서 사고하는 연구자들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의 대외전략 차원에서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은 대단히 전문적인 지적 배경을 갖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분구체제를

⁴² 이희옥,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초청포럼, 2011.4.29).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업무에 많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은 다원화, 전문화, 제도화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로서 정책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7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⁴³

첫째, 정책의제 발굴과 건의이다.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정부의 정책이념을 제공하거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를 상급기관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당 중앙에 보고한다. 이들은 대부분 매년 정규 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당 중앙에서 수시로 내려오는 과제를 통해 정책을 건의한다. 주요 제목은 당 중앙, 국무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등의 고위층에서 지정한다. 예를 들면, 2005년 ‘사회주의조화사회론’은 당 중앙이 중국사회과학원과 당교 등에 분야별 세부연구를 위탁한 후 그 내용을 취합, 정리한 결과이다.

둘째, 정책자문이다.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중앙과 지방의 고위 지도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질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정책연구기관장 또는 전문가들은 고위 관료가 해외방문이나 외빈의 방중 시 해당국가의 정책입장 또는 국제정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당 정치국은 집체학습 시 2~3명의 전문가나 학자를 초빙해 강연의 형식으로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셋째, 정책평가이다. 중국의 정책 패턴은 문제발견 → 목표 확정

43. <<http://www.chinathinktank.com>> (검색일: 2012.6.19).

→가치표준 확정 → 각종 관련 정보·자료수집 → 예비 방안 수립, 분석 및 평가 → 최우선 방안 선택 → 시범 실시 → 조정 → 전면 실시가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국제연구 및 기초조사를 통해 정책을 생산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책 제시 후의 운영이나 성과를 평가하는데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정책홍보와 교육이다.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공개된 저작, 보고서, 논문, 언론기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중국정부의 정책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은 중국의 하위 공무원과 일반 민중이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간접적 효과를 거두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다섯째, 정보수집이다. 일부 싱크탱크는 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정보기관의 업무 특성 상 비공개적인 활동을 통한 정보 수집을 위주로 하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학술연구를 명목으로 정보·자료 수집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국가안전부 제8국,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는 국가안전부 제15국, 중국국제전략학회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 2부에 속한 외연기구이다.

여섯째, 해외와의 소통과 홍보이다.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외국의 주요 학술기관과 빈번한 학술교류를 함으로써 중국정부가 외국과 접촉하는 중요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해외의 싱크탱크와 상호 교류를 통해 전문지식을 교환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중국정부는 해외를 방문한 정책연구기관 학자들의 정책설명을 통해 중국의 국제이미지 개선 또는 발언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이 경우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은 주요국과의 1:5 또는 2 트랙의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상호 정책방향을 이해하는 한편, 더 나아가 중국의 정책방향을 상대국에 이해시키고 간접적이거나 상대국의 정책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04년 말 개혁개방논단 이사장이었던 정비젠(鄭必堅)은 유럽 각국을 순방하며 중국의 ‘평화부상론’을 홍보한 적이 있었다. 중국정부는 비관료 신분으로서의 외교적 활동이 중국의 국익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어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일꾼재, 정책인재의 공급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와 비교하면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정책연구기관도 정책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샤용(夏勇) 전 소장의 국가보안국장 발탁과 북경대학 중국경제연구센터 이왕(易綱) 부주임의 중국인민은행 화폐정책사(司) 사장 겸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인재의 공급기능보다 퇴직관료의 수용 기능이 더 크다. 즉, 중앙 당교 상무부교장을 퇴직한 정비젠의 개혁개방논단 이사장 부임,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송광카이의 중국국제전략학회 회장 부임, 그리고 첸지천 부총리의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부임 등이 그 사례이다.

Ⅲ.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

1. 정책연구기관 현황

가. 현황 소개

앞장의 분석을 토대로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연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10대 싱크탱크 중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은 중국사회과학원,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중국국제전략학회, 상해국제문제연구원 등이며, 10대 싱크탱크는 아니지만 최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반관반민의 싱크탱크 중 한반도와 관련된 정책연구기관은 개혁개방논단, 북경대학, 청화대학, 상해사회과학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다 지방정부 차원이지만 지리적 특성상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동북3성의 사회과학원과 길림대 동북아연구원을 추가하면 중국의 한반도 관련 주요 싱크탱크는 <표 III-1>과 같다. 이하에서는 상기 14개 정책연구기관의 기본 현황을 소개한다.⁴⁴

⁴⁴ 각 기관의 홈페이지 및 김홍규, 『중국 국제정치 분야 싱크탱크 연구: 후진타오 시기를 중심으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10)를 참고하여 작성.

● 표 III-1 중국의 한반도 관련 주요 싱크탱크 현황

(2012년 8월 현재)

지역	소속기관	기관명	기관장	참고
북경	중앙당교	개혁개방논단: 한반도평화연구센터	리징텐 (李景田)	당교 부교장, 미중정상회담 수행
	국무원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천쿠이위엔 (陳奎元)	공산당 중앙위원
	외교부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전협력연구실	취싱 (曲星)	외교관, 외교부 정책 자문
	국가안전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조선반도연구실	추이리루 (崔立如)	후진타오 자문위원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류칭진 (劉成軍)	당 중앙위원
	북경대	국제전략연구센터	왕지스 (王緝思)	후진타오 자문위원
	청화대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연슈에통 (閻學通)	전 국무위원 탕자슈엔 명예원장
	반관반민	중국국제전략학회	승광카이 (熊光楷)	예비역 장성, 미중국방대화 대표(전)
상해	상해시 정부	상해사회과학원	왕롱화 (王榮華)	상해정부 자문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양제멘 (楊潔勉)	양제츠 외교부장의 친동생, 후진타오 자문위원
동북	길림성정부	길림성 사회과학원	마커 (馬克)	성 정부 정책자문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주시엔핑 (朱顯平)	창지투 프로젝트 입안
	요녕성 정부	요녕성 사회과학원	바오전둥 (鮑振東)	성 정부 정책자문
	흑룡강성 정부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취웨이 (曲偉)	성 정부 정책자문

(1) 개혁개방논단 한반도평화연구소

개혁개방논단은 중국공산당 중앙당교(中央黨校)의 핵심 연구기관이다. 개혁개방논단은 1994년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 중 발생하는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학제적 연구를 통해 당 지도부에 정책건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동 기관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국내외 정책, 경제, 외교 등의 발전 동향을 분석·보고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를 수렴하고 당의 정책을 확산하는 창구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바, 중국의 전문가와 미국의 RAND, CSIS 포함 세계 20여 개 국가의 연구기관과 활발한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현 기관장은 중앙당교 상무 부교장인 리징텐(李景田) 이사장이 맡고 있으며, 학자와 고급관리로 구성된 8명의 부이사장과 14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이사장은 리쥘루(李君如, 중앙당교 부교장), 천바오성(陳寶生, 중앙당교 부교장), 순즈하이(孫志海, 국제문화교류센터 부이사장), 루종웨이(陸忠偉, 중일우호21세기위원회 위원), 타이장(陶一江, 중국국제문화교류센터부이사장), 딩구이송(丁奎松, 개혁개방논단 고급연구원), 저우홍(周弘, 중국사회과학원유럽연구소 소장), 쉬에푸캉(薛福康, 광명일보 前국제부주임) 등이며, 고급자문위원은 웨이리첸(魏禮群, 국가행정학원 상무부원장), 령룉(冷溶, 중앙문헌연구실 주임), 니젠민(倪建民, 전국총노조 부주석), 리지에(李捷, 중앙문헌연구실 부주임), 저우원중(周文重, 중국주미대사), 우젠민(吳建民, 외교학원 원장), 마전강(馬振崗, 전주영대사), 린디(林地, 개혁개방논단 前 부이사장), 판전창(潘振強, 국방대학전략연구소 前소장), 루오위안(羅援, 군사과학연구원 전략연구부 부부장), 딩위안홍(丁原洪, 前주EU대사), 왕

지스(王緝思,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왕시엔장(王憲章, 중국보험업협회 회장), 웨이젠룽(魏建榮, 교육부 대학법학과 교학지도위원회 위원), 황판장(黃范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前부원장) 등이다.

개혁개방논단은 산하에 중미전략센터, 한반도평화연구센터, 경제·사회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6년 1월 설립한 한반도평화연구센터는 안보문제를 핵심으로 한반도 관련 문제 전반을 연구하는 부설 연구기구로서 당 고위층에게 정책제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 연구센터가 추가로 설립된 이유는 한반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 지역이자 중국의 국익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중국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평화연구센터의 주임은 위메이화(于美華)이며 판전창(潘振強) 전 장군이 고문으로 있다. 전임 연구원을 두고 있지 않지만 중량급의 객원 연구진과 당의 지위를 통해 필요에 따라 연구진을 구성할 수 있는 허브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객원 연구진으로는 왕바오푸(王宝付, 국방대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왕이성(王宜胜,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연구원), 류장용(劉江永, 칭화대학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류젠페이(劉建飛,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리취첸(李居遷, 중국정법대 국제공법연구소 소장), 팡중잉(龐中英,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위샤오화(虞少華,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쉬웨이디(徐緯地, 국방대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 등이 있다. 주요 간행물로는 2001년 3월 창간한 월간지 『중국전략관찰(中國戰略觀察)』이 있다.

(2) 중국사회과학원(CAS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산하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및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은 1977년 5월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창의적인 이론 틀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정책연구를 지원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동 기관은 중국 내에서 철학·사회과학 연구를 담당하는 최고의 학술기관이자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 연구 및 국가중점 연구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中國社會科學』, 『歷史研究』, 『考古』, 『哲學研究』, 『經濟研究』, 『法學研究』, 『文學評論』 등 82종의 학술잡지를 발간하며 중국인문·사회과학연구의 최신 성과와 학술 정보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현 기관장은 천쿠이위엔(陳奎元) 원장이며 왕웨이(王偉), 리선밍(李慎明), 주자무(朱佳木), 가오취앤리(高全立), 리지에(李捷), 우인(武寅), 리양(李揚), 리치우팡(李秋芳) 등 8명의 부원장을 두고 있다. 또한 산하의 31개 연구소와 45개 연구센터에서 총 3,200여 명의 연구진이 활동 중이며 고급전문연구자(高級專業人員)의 수만 1,700여 명이나 되는 방대한 연구기구이다. 한반도 관련 연구는 주로 산하의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NIIS: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y, CASS)과 시아태평양연구소와 세계경제정치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가) 아시아태평양연구소(IAPS: Institute of Asia Pacific Studies, CASS)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은 학술 관련 기초연구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1988년 설립된 아태연구소를 2012년 확대개편

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제관계, 사회문화 등이며, 한반도 관련 주요 간행물로는 월간 『당대아태(當代亞太)』가 있다.

현 소장은 리상양(李向陽)이며, 한평(韓鋒), 리원(李文), 순스하이(孫士海) 등 3인의 부소장이 활동하고 있다. 산하에 경제연구실, 지역협력연구실, 안보·외교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중국주변전략연구실 등 6개의 부설 연구실과 동북아연구센터와 동남아연구센터 등 2개의 연구센터에서 총 60여 명의 연구진이 활동하고 있다. 파오젠이(朴鍵一)가 주임인 동북아연구센터에서 한반도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나 각 부설 연구실에서도 한반도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장인링(張蘊齡), 동상롱(董向榮), 진잉지(金英姬), 파오광지(朴光姬), 왕샤오링(王曉玲) 등이 대표적 전문가들이다.

(나) 세계경제정치연구소(IWEP: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Politics, CASS)

세계경제정치연구소는 1964년 중국과학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연구실을 모태로 설립되었으며, 1980년 세계정치연구소와 세계경제연구소가 통합되어 현재의 기구로 공식 설립되었다. 동 기관은 세계의 경제제도, 경제개혁 및 정책, 발전전략 등 세계경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와 정책 참고자료를 통해 중국 정부에 경제건설 관련 정책건의와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WTO와 세계무역자유화, 다국적 기업 세계전략과 FDI, 금융 세계화와 금융위기, 국제 금융체제 개혁, 역내 통화 협력, 중국 거시경제문제, 중국의 무역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간행물로는 연간인 『세계경제정세분석과예측(世界經濟形勢分析與預測)』과 『글

로벌정치와안보보고서(全球政治與安全報告)』, 월간인 『세계경제(世界經濟)』와 『세계경제와정치(世界經濟與政治)』가 있으며, 이중 『세계경제와정치』에 한반도 관련 연구가 주로 수록된다.

현 소장은 장위위앤(張宇燕)이며, 허판(何帆) 부소장과 산하에 10개의 연구실 및 8개의 연구센터에서 80여 명의 연구진이 활동하고 있다. 산하 연구실로는 국제금융연구실, 국제무역연구실, 다국적세계연구실, 세계경제통계분석연구실, 세계기업구조연구실, 세계경제발전연구실, 국제정치연구실, 국제전략연구실, 종합연구실, 마르크스주의 세계정치경제이론연구실 등이 있으며, 연구센터로는 세계경제연구센터, 제3세계연구센터, 글로벌M&A연구센터, 국제금융연구센터, 기업거버넌스연구센터, 세계경제사연구센터, 세계화상연구센터, 발전연구센터 등이 있다. 한반도 관련 연구는 경제 및 외교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나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의 연구도 수행한다. 주요 연구자로는 리샤오쥘(李少軍), 리동옌(李東燕), 샤오핑(邵峰) 등이 있다.

(3)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중국국제문제연구소는 1956년 중국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로 설립되었으나 1986년 중국국제문제연구소로 개칭되었고, 1998년 국무원에서 외교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 변경되었다. 동 기관은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에 따른 대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제정치경제와 국제문제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중국 외교부에 정책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책연구와 함께 외교부 산하기구로서 국제무대에서 외교관의 역할도 수행하

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가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중국 측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전략과 지연정치, 국제동향, 미국 및 중미관계, 아태지역 안보협력, 개발도상국,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이며, 국내외 학자 및 연구기관과 다양한 형태의 학술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간행물로는 중국 내 국제정치 및 국제관계 분야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 이론연구 및 정책분석 저널인 『국제문제연구(國際問題研究)』(격월간, 1959년 창간)가 있다.

현 기관장은 취싱(曲星)이며, 루안종저(阮宗澤), 귀시엔강(郭憲綱), 류여우파(劉友法), 동만위안(董漫遠) 등 4명의 부소장을 두고 있다. 연구부서로는 국제전략연구부, 미국연구부, 동태정보와돌발사건연구부(動態信息和突發事件研究部), 아태안보협력연구부, 유라시아연구부, 상해협력기구연구부, 세계경제와발전연구부 등 8개 부서에서 외교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총 60여 명의 연구진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아태안보협력연구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안보문제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며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는 중국 주변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정책을 건의한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을 비롯하여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정치, 경제, 군사와 외교정책 및 중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주임은 위샤오화(虞少華)이며, 관련 연구진으로는 양시위(楊希雨), 우징징(吳晶晶), 진린보(晉林波), 스용밍(時永明) 등이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의 자매결연기관인 국립외교원과 정기교류를 추진하고 있으

며 이밖에 통일연구원 및 세종연구소와도 비정기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4)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한반도연구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1965년 비공개 조직으로 설립되었다가 1980년 국무원 국가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공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2003년 ‘현대국제관계연구소’를 거쳐 현재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국제문제 관련 대표적인 종합 연구기관이다. 국제전략, 세계정치, 세계경제,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외교, 지역안보 및 협력문제, 홍콩·대만문제 등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국제전략 및 현안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와 정보 분석 자료를 관련 정부부문이나 고위층에게 제공한다. 또한, 기관 성격 상 대외문제 관련 정책 접근도와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세계 주요 국가의 연구기관과 국제학술회의와 세미나 등 각종 학술교류 및 인적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관계 분야 전문 석·박사 학위 수여기관이기도 하다. 주요 간행물로는 월간 『현대국제관계(現代國際關係)』,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자료정보(國際資料信息)』 등이 있다.

현 기관장은 추이리루(崔立如) 원장이며, 차기 기관장으로 거론되는 지즈예(季志業) 상무부원장 및 리후이잉(李惠英), 양밍제(楊明杰), 레이홍(雷虹), 왕자이방(王在邦), 리샤오셴(李紹先) 등 5명의 부원장 하에 총 150여 명의 우수한 연구진이 포진해 있다. 산하에 11개의 연구소, 2개의 연구실, 8개의 연구센터에서 총 150여 명

I
II
III
IV

의 연구진이 근무하고 있다. 산하 연구소로는 러시아연구소, 미국 연구소, 유럽연구소, 일본연구소, 안보군축연구소, 세계경제연구소, 세계정치연구소,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남아시아동남아연구소,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정보와 사회발전연구소 등이 있으며, 연구실은 중앙아시아연구실과 한반도연구실이며, 연구센터로는 민족종교연구센터, 반테러연구센터, 위기관리연구센터, 경제안보연구센터, 대만연구센터, 홍콩마카오연구센터, 세계화연구센터, 해양전략연구센터 등이 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이러한 조직을 통해 세계 전 지역 및 이슈를 망라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 관련 연구는 한반도연구실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한반도연구실은 중국 내 가장 권위 있는 한반도 연구기구 중에 하나로서 한반도 정세, 남북한의 정치·경제·군사·외교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임은 중국 내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치바오량(戚保良)이며, 리쥘(李軍) 연구원을 비롯해 다수가 포진해 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한국의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과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5)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은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의 군사 관련 연구기관으로 1958년 3월에 창설되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은 군사기초이론과 국방건설, 군대건설 등의 분야를 주로 연구하며, 중국 군부의 최고기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총참모부에 정책 자문과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은 중국의 10대 싱크탱크에 포함되며, 특히 군사 및 안보 관

런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기관이다.

현 기관장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인 류청권(劉成軍) 원장이며, 류지시엔(劉繼賢)과 쉬리리(徐莉莉)가 부원장, 중앙군사위원회 기술위원회 부서기인 순스징(孫思敬)이 정치위원, 왕선타이(王森泰)가 부정치위원으로서 임원을 구성하고 있다. 산하에 전략·전역전술·군제·군사역사·외국군사·군사백과사전·모택동 군사사상연구 등의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군 내부와 외부에서 초빙한 겸직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 관련 연구는 세계군사연구부의 아태연구실에서 주로 담당하나 군사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기관의 특성 상, 외부에 알려진 한반도 전문가는 많지 않다. 다만 왕이성(王宜勝)은 잘 알려진 한반도 안보 전문가이다. 이밖에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은 석사 이상의 고급 군사인재 양성도 담당하고 있으며, 10여 개 국가와 학술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방연구원이 교류협력기관이다. 주요 간행물로는 『중국 군사과학(中國軍事科學)』, 『군사학술(軍事學術)』, 『외국군사학술(外國軍事學術)』 등이 있다.

(6)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국제전략연구센터

북경대학 국제전략연구센터는 1998년 국제정치학과 국제관계연구소와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를 통합해 설립한 국제관계학원의 산하에 2007년 5월 신설된 연구기구이다. 설립 목적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상호 긴밀성과 복잡성이 증대하는 국제문제의 이론 및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며, 국제문제 및 외교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결과를 정부의 유관 부문에 제공하는 활동도 활발히 병행하고 있다. 주요 간행물로는 계간 『국제정치연구(國際政治研究)』가 있다.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왕지스(王緝思) 교수이며, 위엔밍(袁明), 자칭궈(賈慶國), 쉬전저우(許振洲), 관구이하이(關貴海) 등 4인의 부원장과 50여 명의 교수 및 전문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기관은 산하에 국제정치학과 외교·외사관리학과, 국제정치경제학과 등 3개 학과와 17개의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7개의 연구센터는 안보연구센터, 한국학연구센터, 국제조직연구센터, 중국과 세계연구센터, 미국연구센터, 아프리카연구센터, 화교화인연구센터, 동서방문화연구센터, 국제평화안보센터, 당대러시아연구센터, 동북아지역일체화연구센터, 중동연구센터, 중앙 및 동유럽연구센터, 국제문화교류와 교육연구센터, 세계신에너지전략연구센터 등이다.

한반도 관련 연구는 한국학연구센터와 국제전략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데, 외교안보 분야는 국제전략연구센터의 연구 활동이 더 활발한 편이다. 국제전략연구센터는 세계 정치, 국제안보, 국가전략 등 제반 분야에서 학술연구와 정책연구를 촉진하고자 설립되었으며, 특히 현재 중국이 직면한 국제환경과 관련 국가들의 국제 전략을 분석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센터의 주임은 국제관계학원장인 왕지스가 겸임하고 있으며, 위엔밍(袁明) 상무 부주임과 뉴쥘(牛軍), 왕정이(王正毅), 예즈칭(叶自成), 주평(朱鋒) 등이 부주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경대학 국제전략연구센터는 국가기관이 아닌 대학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제도화된 항시성의 정책적 영향력은 약하나 최근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기관이다.⁴⁵

⁴⁵ 일례로, 국제관계학원장이자 국제전략연구센터의 주임인 왕지스는 중국 내 손꼽히는 미국 전문가로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대외정책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다.

(7) 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은 2010년에 기존의 국제문제연구소(1997년 설립), 국제관계학과(2008년 설립), 정치학과(2009년 설립)를 통합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대학 부설 연구원에 걸맞게 연구와 교학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제안보전략, 국제군축, 경제외교, 중국의 대외정책, 국제정치 사상 및 동아시아, 북미, 유럽 국제전략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 원장은 연쉬에통(閻學通)교수이며, 류장용(劉江永), 장샤오진(張小勁) 부원장과 산하에 11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센터로는 중미관계연구센터, 유라시아전략연구센터, 중유럽관계연구센터, 중국대외정책연구센터, 공공외교연구센터, 국제정치철학연구센터, 경제외교연구센터, 카네기기금글로벌정책연구센터, 비교지역일체화연구센터, 민주와치리(治理)연구센터, 중국정치발전연구센터 등이 있다.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센터는 없으며 지역 차원의 연구보다는 국제관계 차원, 특히 중미관계의 틀로 한반도를 보고 접근하거나, 정량분석 기법을 활용한 국제관계 연구에서 하위 주제로 다루기도 한다. 동 연구원은 후발 주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무위원인 탕자쉬안(唐家璇)을 명예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정부와 협력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미관계연구센터의 경우 2008년 이후 재정부, 외교부, 대만사무관공실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장급 퇴직 관료 8명을 연구원으로 영입하면서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기관이다. 당대국제관계연구원은 현재 군비통제 및 외교여론 관련 국가와 성급의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간행물로는 『국제정치

과학(國際政治科學)』이 있다.

(8) 중국국제전략학회(China Institution for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CIISS)

중국국제전략학회는 1979년 10월 북경국제전략문제학회로 설립되었고 1992년 오늘날의 중국국제전략학회로 개명되었다. 동 학회는 군사,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학술교류 및 관련 정부부처에 자문과 정책건의를 하며, 주요 연구 분야로는 국제전략, 글로벌 안보, 세계정치경제, 군사, 외교, 지역문제 등이 있다.

현 회장은 송광카이(熊光楷: 전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며, 조직은 관공실, 연구부, 편집출판부, 도서자료실, 자문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성격의 학술단체이나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주요 회원들은 군 출신이나 군사 관련 전문가로서 학술연구보다 중국 군부에 정책자문 활동에 더 치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핵문제나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 관련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 군부의 국제전략 및 안보 분야에서 대외교류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40여 개 국가의 100여 개 국제문제 싱크탱크와 각종 교류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방연구원과 성우회 등 국방 관련 단체와 정례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간행물로는 계간지 『국제전략연구(國際戰略研究)』가 있다.

(9) 상해 국제문제연구원(SIIS: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상해 국제문제연구원은 1960년 중국 정부와 상해시 정부에 국제문제와 전략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립되었다. 2008년 상해국제문제연구소를 거쳐 오늘날의 상해국제문제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최근 국제정치경제와 안보문제 및 중국의 대외관계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일본, 유럽, 아태지역,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등 국제조직과 국제관계 분야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상해 국제문제연구원은 현 중국외교부 부장 양제츠(楊潔篪)의 친동생인 양제몐(楊潔勉)이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정책적 영향력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부원장인 천동샤오(陳東曉), 양젠(楊劍)과 우춘스(吳菡思), 리슈스(李秀石), 마잉(馬嫻), 위신텐(俞新天) 등 총 30여 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에 국제전략연구소, 외교정책연구소, 글로벌치리연구소, 세계경제연구소, 대만마카오연구소, 비교정치와 공공정책연구소, 정보연구소 등 7개의 연구소와 남아시아연구센터,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센터, 아태연구센터, 러시아중앙아시아연구센터, 유럽연구센터, 미주연구센터, 해양과 극지연구센터, 세계민족종교문화연구센터, 국제부녀비교연구센터, 세계와상해연구센터 등 10개의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반도 관련 연구는 아태연구센터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방향은 아태지역과 동아시아·동남아시아·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 아태지역의 국제관계 및 경제·정치·안보·문화, 중국의 아태정책 등이다. 리슈스(李秀石) 주임과 캉더구이(廉德瑰), 공커위

I
II
III
IV

(龔克瑜) 부주임 등은 잘 알려진 전문가들이다. 주요 간행물로 계간 『국제문제논단(國際問題論壇)』이 있다.

(10) 상해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상해 사회과학원은 1958년 중국과학원 산하 상해경제연구소와 상해역사연구소, 상해재경학원, 화동정법학원, 복단대학 법학과를 통합하여 설립하였다. 설립 목표는 정치, 경제, 사회발전, 종교, 역사, 언론매체, 국제관계 등 분야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상해시 정부 및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데 있다. 원장은 왕론희(王榮華)이며, 부원장은 쥬쉬에진(左學金), 선위밍(沈國明), 송웨즈(熊月之), 황런웨이(黃仁偉), 시에징후이(謝京輝) 등이다.

상해 사회과학원은 지방 소재의 연구기관이라는 한계로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나 지방 사회과학원 중 활동이 가장 왕성한 기관으로 평가된다. 사회과학원의 특성 상 중국 정부와 상해 시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한반도 관련 연구는 부설 국제관계연구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상해 사회과학원 부설 국제관계연구소는 2011년 9월 상해 사회과학원 내 동유럽중서아시아연구소와 아태연구소를 통합해 설립한 상해 사회과학원의 중점 연구소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국제전략, 국제조직,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및 중국의 대만문제 등 외교와 국가안보전략 등이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류밍(劉鳴)이며, 산하 6개의 연구실과 12개의 연구센터에 29명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실은 국제관계이론연구실, 국제안보연구실, 지역협력

연구실, 대국전략연구실, 중국외교연구실, 국제문화연구실 등이며, 연구센터로 미국연구센터, 러시아연구센터, 일본연구센터, 한반도연구센터, 동남아연구센터, 상해협력기구연구센터, 유태연구센터, 중남아시아연구센터, 중동연구센터, 세계사연구센터, 대만연구센터, 신흥국가연구센터 등이 있다.

국제관계연구소 산하 한반도연구센터(朝鮮半島研究中心)는 1993년 2월 설립된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와 경제발전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상해 지역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국제관계연구소장인 류밍이 한반도연구센터의 주임을 겸임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진으로는 왕샤오푸(王少普, 북일관계, 북한 경제개혁), 양홍메이(楊紅梅, 한미군사관계, 한반도평화체제), 류아밍(劉阿明, 북한과 강대국 관계), 후량명(胡良孟, 한국 국내정치와 경제) 등이 있다. 아울러 공개 간행물인 『국제관계연구(國際關係研究)』와 내부 간행물인 『국제문제정보(國際問題專報)』를 발행하고 있다.

(11) 길림성 사회과학원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1958년과 1962년에 각각 설립한 철학·사회과학학술조(組)와 동북문사(文史)연구소를 통합한 후 1978년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길림성 사회과학계연합회, 길림성경제학단체연합회, 길림성위강사단을 통합해 2002년 길림성사회과학원(사회과학연합회)으로 출범하였다. 또한, 길림성 정부 소속인 동북아연구센터도 대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성 정부의 직속기구로서 길림성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와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 관리, 교육 등 종합적 기능을

갖춘 길림성 내 사회과학 분야의 최대 연구기관이란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규모는 작지 않다. 마커(馬克)원장 및 푸바이천(付百臣), 텡상화(田相華), 사오한밍(邵漢明), 류야정(劉亞政), 황원이(黃文藝) 등 5명의 부원장과 연구인력 175명을 포함한 총 301명의 인원이 재직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마르크스주의연구소, 철학문학연구소, 언어문학연구소, 역사연구소, 경제연구소, 농촌발전연구소, 사회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소프트과학연구소, 일본연구소, 조선한국연구소, 러시아연구소, 도시발전연구소, 민족연구소 등 14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고구려연구센터와 동북아연구센터의 2개 연구센터도 보유하고 있다.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3대 연구 중점은 길림성 경제사회발전, 동북변강역사와 현상문제, 동북아문제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북공정(東北工程) 연구의 핵심 기관이기도 하다.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관련 연구기구는 조선한국연구소이며, 주요 연구방향은 한반도의 정치, 경제, 역사로서, 세부 내용은 한국의 독립운동, 정당정치, 한국의 공업화 경험 및 과정, 북한의 경제건설 및 핵문제, 두만강지역협력개발, 창지투(長吉圖)의 교통로건설 등이다. 조선한국연구소 소장은 길림성 조선한국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장위산(張玉山)이며, 주요 연구진으로는 주랴오예(朱遼野:조선족), 한중푸(韓忠富:조선족), 송젠(宋健) 등이 있다.

북한과 약 1,000km에 걸친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길림성의 특성 상 북한과의 학술 및 인적교류가 활발하며 중국 내에서 가장 활발한 북한연구를 수행해 온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길림성의 한반도 연구를 이끌어 온 1세대 연구진의 노쇠화와 신진연구

진이 충원되는 세대교체기에 돌입한 관계로 약간의 공백이 노정된다는 평가도 있다. 주요 학술간행물로는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사회과학전선(社會科學前線)』, 『경제종횡(經濟縱橫)』과 길림성 동북아연구센터의 『동북아연구(東北亞研究)』가 있다. 특히, 동북아연구는 한반도 관련 논문이 많이 게재되는 학술지 중에 하나이다.

(12)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길림대 동북아연구원은 1994년 길림대 내 일본, 인구, 러시아, 조선·한국, 두만강국제개발, 구역경제 등 6개 연구소를 통합해 동북아연구원으로 확대하면서 출범하였다. 길림대학이 동북아연구원을 설립한 목적은 동북아 개별 국가 연구에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성 정부에 정책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길림대 동북아연구원은 길림성 정부의 동북진흥기지로 지정됨에 따라 창지투(長吉圖) 개발개방선도구 계획과 두만강지역개발 협력의 주요 입안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길림대 동북아연구원은 북한의 나선특구, 두만강유역, 백두산개발 등 북중경협에 깊은 영향을 주는 연구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경제, 러시아경제, 남북한경제, 지역경제이론, 지역경제개발전략, 동북아지역정치, 인구사회학, 인구경제학, 인구자원과 환경, 자원과 환경경제학, 지속가능한 발전, 일본문학, 중일관계사, 중러관계사 등이다. 또한, 동북아연구원은 동북아 각국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동북아포럼을 매년 개최하는 등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동국대 북한학과와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북아연구원의 원장은 주시엔핑(朱顯平) 교수가 맡고 있으며,

천징옌(陳景彥), 위샤오(于瀟), 장후이즈(張慧智), 차오하이보(曹海波) 등 4명의 부원장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산하에 세계경제연구소, 구역경제연구소, 인구자원환경연구소, 국제정치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두만강국제개발연구소 등 6개의 연구소와 중국과 주변국가 지역협력연구센터, 동북아정보문헌센터 등 2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반도 관련 연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지역협력연구 차원에서 한반도 연구를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64년에 설립되어 중국 내 북한연구의 메카로 기능하던 조선연구소가 동북아연구원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성과와 전통도 그대로 계승하려는 특성도 갖고 있다. 다만 길림성 사회과학원과 경쟁적 협력관계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세대교체에 성공적인 길림대 동북아연구원이 최근 역할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부원장인 장후이즈를 비롯 파오잉아이(朴英愛), 런밍(任明), 쉬원지(徐文吉), 귀루이(郭銳) 등 다수의 연구 인력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요 간행물인 『동북아논단(東北亞論壇)』(1992년 창간, 월간)은 동북아연구와 함께 길림성의 한반도 관련 대표적 학술지로 평가된다.

(13) 요녕성 사회과학원

요녕성 사회과학원은 1978년 요녕성 철학사회과학연구소를 개편하여 설립되었다. 요녕성 정부 직속 청(廳)급 사업단위인 요녕성 사회과학원은 성내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요녕성 당과 정부 정책결정을 자문하고 요녕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에 정책적 기여를 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주요 간행물로는 『사회과학집간(社會科學輯刊)』이 있다.

현 기관장은 바오전둥(鮑振東)원장이며, 차오샤오핑(曹曉峰), 리샹핑(李向平), 순홍민(孫洪敏) 등 3명의 부원장과 연구인력 160여명 포함 210명이 재직중이다. 산하에 철학연구소,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연구소, 법학연구소, 사회학연구소, 민속연구소, 문학연구소, 역사연구소, 당사연구소, 변강사지연구소, 성(省)정세연구소, 금융연구소, WTO연구소, 인적자원연구소, 정보연구소 등 15개의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반도 관련 연구는 분야별 연구소에서 수행하거나 별도로 변강사지연구소 부설 한반도연구센터(朝鮮半島研究中心)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연구센터의 주임은 뤼차오(呂超)이며, 비서장인 진저(金哲)와 세계경제연구소 부연구원인 우잉즈(禹穎子)가 한반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한반도연구센터는 북한 영사관이 소재하는 선양과 북중 무역의 관문인 단둥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하며 북한 내부 정보에도 밝아 이에 관한 연구가 특화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14)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은 1979년에 건립된 흑룡강성의 최대 정책연구기관이다. 동 기관은 1960년에 설립된 중국과학원 흑룡강 분원 철학·사회과학 학부와 1964년에 설립된 흑룡강성 철학·사회과학연구소를 통합해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흑룡강성의 철학 및 사회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성 당위원회와 성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세계경제, 정치학, 동북사, 사회학, 농촌경제관리, 과학사회주의, 동북지방문화사,

동북아시아지역 경제, 중러관계사, 하얼빈 유대인역사문화사, 발해 국가, 현 지역 경제 등이며, 8개의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발간물로는 공개간행물인 『흑룡강사회과학(黑龍江社會科學)』, 『학습여탐색(學習與探索)』, 『시베리아연구(西伯利亞研究)』, 『흑룡강년감(黑龍江年鑒)』, 『흑룡강민영경제년감(黑龍江民營經濟年鑒)』 등이 있다. 내부 간행물로는 『요약보고(要報)』, 『흑룡강성 사회과학통신(黑龍江省社會科學院通訊)』, 『동북아경제정보참고(東北亞經濟信息參考)』, 『향정과대책(鄉情與對策)』 등이다.

현 기관장은 취웨이(曲偉) 원장이며, 주위(朱宇), 장신잉(張新穎), 류샹(劉爽) 등 3명의 부원장과 약 207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구기구로 역사연구소, 정치학연구소, 경제연구소, 철학연구소, 사회학연구소, 문학연구소, 러시아연구소, 동북아연구소, 응용경제연구소, 농촌발전연구소, 인생과학연구소 등 11개 부설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동북아와 국제문제연구센터, 등소평이론연구센터, 하얼빈유대인역사문화연구센터, 발해사연구센터, 흑룡강반사교연구센터, 향진발전과 건설연구센터 등 6개의 연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한반도 관련 연구기구는 1989년 9월 설립된 동북아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소는 2002년 흑룡강성의 동북아경제연구기지로 유일하게 지정된바, 성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장은 송쿠이(宋魁)이며, 단즈강(筧志剛) 부소장과 순용(孫永), 차오즈홍(曹志宏) 등의 연구진이 소속되어 있다. 또한, 이 연구소 산하에 진메이즈(金美子)를 주임으로 하는 한반도문제연구실(朝鮮半島問題研究室)이 설치되어 있다. 다만 흑룡강성의 지리적 입지상 러시아 및 동북아 지역협력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바, 한반

도 연구는 길림성 및 요녕성에 비해 활발한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경사된 시각보다 동북아협력 차원에서 한반도 연구에 접근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일례로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는 2008년부터 매년 6월 동북아지역협력발전 국제포럼을 개최해왔으며 5회 포럼에 북한 측 인사가 참여하기도 했다.

나. 기관 간행물 분석

여기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14개 정책연구기관의 주요 간행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14개 정책연구기관의 내부 보고 문건이나 정책보고서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의 대외 공개 간행물 분석은 한반도 관련 중국 싱크탱크의 한반도 연구관심도를 파악하는데 간접적이거나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술지 성격의 대외 간행물이 해당 기관의 공식견해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기관의 연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개간행물이 갖는 정책홍보와 확산의 기능을 감안하면 정책연구기관의 대표적 간행물에 실린 한반도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 동향은 연구관심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선정한 14개 정책연구기관의 대표적 학술지인 16개 주요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국제문제연구(國際問題研究),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의 국제정치연구(國際政治研究),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의 당대아태(當代亞太) 및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세계경제와정치(世界經濟與政治), 개혁개방논단의 중국전략관찰(中國戰略觀察),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현

I
II
III
IV

대국제관계(現代國際關係),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의 중국군사과학(中國軍事科學), 상해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의 국제관계연구(國際關係研究), 상해 국제문제연구소의 국제전망(國際展望), 길림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센터의 동북아연구(東北亞研究),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경제총횡(經濟縱橫), 사회과학전선(社會科學戰線), 길림대 동북아연구소의 동북아논단(東北亞論壇), 요녕성 사회과학원의 사회과학집간(社會科學輯刊),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의 학습과탐색(學習與探索) 및 흑룡강사회과학(黑龍江社會科學) 등이다.

이상 16개의 간행물에 2002년부터 2012년(4월)까지 약 10년 동안 게재된 한반도 관련 연구논문을 조사한 결과 총 615편의 논문을 발견하였다. 한반도 관련 논문 중에 사회문화와 역사 등 인문분야는 제외하고 정치경제 분야만 선별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를 연구주제별로 우선 3분한 후 다시 7개의 세부주제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관련 615편의 연구주제들은 모두 한국, 북한 그리고 남북한이 관련된 주제(한반도)에 포함되었다. 한국 관련 주제의 경우 다시 국내 정치경제 문제와 한중관계의 범주에, 북한 관련 주제의 경우 역시 국내 정치경제와 북중관계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남북한 관련 주제의 경우에는 남북관계, 외교안보, 경협 등 3개의 주제로 분류하였는데, 남북관계로 분류된 주제에는 남북관계 일반과 통일문제, 남북경협, 북한의 대남정책 및 한국의 대북정책 등을 포함하였다. 외교안보로 분류한 연구주제에는 북핵문제나 6자회담과 같이 남북한의 공통 문제는 물론 중국 및 주변국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포함하였고, 경협의 경우에는 남북한과 중국, 남

북한과 러시아와 같이 남북한과 주변국이 포함된 다자간 경제협력을 다룬 논문만을 포함시켰다.⁴⁶

이렇게 분류한 기준으로 14개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의 16개 간행물에 나타난 한반도 연구주제의 연도별 추이를 정리한 것이 <표 III-2>이다. 이에 따르면 연도별로 뚜렷한 특성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2003년(78편)과 2007년(75편)에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 발생 이후 2003년 6자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과 2006년 10월 1차 북핵 실험 이후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03년과 2007년의 북핵 등 외교안보 관련 주제가 각각 40편과 26편으로 다른 해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것도 이를 방증한다.

● 표 III-2 한반도 연구주제 추이

(단위: 편)

구분	한국		북한		한반도			합계
	한국국내 (정치경제)	한중 관계	북한국내 (정치경제)	북중 관계	남북관계 (통일)	외교안보 (북핵)	경협	
2002	10	6	7	3	2	7	2	37
2003	16	3	11	1	5	40	2	78
2004	18	8	10	4	2	12	3	57
2005	21	11	1	3	4	21	8	69
2006	18	11	3	5	2	13	7	59
2007	21	14	3	5	2	26	4	75
2008	16	11	3	2	3	16	4	55

⁴⁶ 다른 주제와의 균형을 위해 한반도를 핵심 주제로 다룬 논문만을 엄선한 바, 동(북)아시아 지역 경협 차원에서 한반도를 부분적으로 다룬 논문을 부득이 제외하였다.

구분	한국		북한		한반도			합계
	한국국내 (정치경제)	한중 관계	북한국내 (정치경제)	북중 관계	남북관계 (통일)	외교안보 (북핵)	경협	
2009	18	6	10	4	3	21	3	65
2010	13	5	8	3	4	15	3	51
2011	9	5	3	7	5	12	5	46
2012*	3	2	3	2	2	9	2	23
합계	163	82	62	39	34	192	43	615

* 2012년은 1~4월

주제별 연구 비중을 보면, 한반도 차원의 연구주제가 269편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한국관련 주제가 245편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북한 관련 주제는 가장 적은 101편이었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 연구에서 북한의 정치경제 문제나 북중관계에 대한 연구 관심이 한국 및 한반도 차원의 연구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비중은 중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한국의 경험이나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연구관심이 높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부상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변지역인 한반도와 한국에 대한 연구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⁴⁷ 한편 중국의 연구 환경상 민감한 주제인 북한 관련 문제를 공개간행물에 게재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⁴⁸

세부 주제별 비중도 이와 유사하다. <그림 III-1>에서 보듯이, 중국의 한반도 연구는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31%), 한국국내

47. 이에 대해서는 한석희, “중국에서의 한반도연구: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2003), pp. 221~243 참조.

48. 2012년 9월 25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필자의 인터뷰.

(27%), 한중관계(13%), 북한국내(10%), 한반도 차원 경험(7%), 북중관계(6%), 남북관계(6%)의 순으로 비중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차원의 연구논문의 비중은 외교안보 관련 주제가 경험이나 남북관계(통일) 관련 주제를 압도하고 있어 이 주제에 대한 연구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북중관계와 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연구관심도가 최저인 점은 주목된다. 이는 중국의 연구관심도가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1 연구주제별 비중



<표 III-3>의 지역 및 학술지별 한반도 연구주제 분포를 보면,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동북아연구와 길림대의 동북아논단이 각각 179, 178편으로 최근 10년간 한반도 관련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했고, 이어서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현대국제관계가 61편,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의 당대아태가 57편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해당 기관이 한반도 전문가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표 III-3 학술지별 한반도 연구주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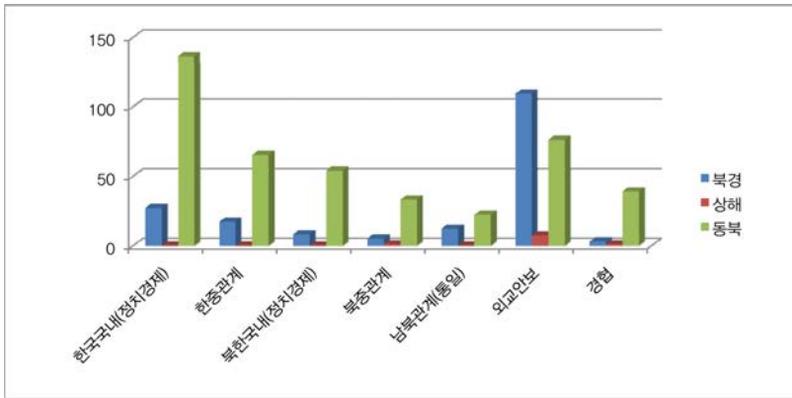
(단위: 편)

구분		한국		북한		한반도			합계
		한국 국내 (정치 경제)	한중 관계	북한 국내 (정치 경제)	북중 관계	남북 관계 (통일)	외교 안보	경협	
북경	국제문제연구	2	4	1	0	0	14	0	21
북경	국제정치연구	0	1	0	0	0	11	0	12
북경	당대아태	17	10	4	3	1	19	3	57
북경	세계경제여정치	1	1	0	2	0	13	0	17
북경	중국전략관찰	0	0	0	0	3	9	0	12
북경	현대국제관계	7	1	3	0	7	43	0	61
북경	중국군사과학	0	0	0	0	1	0	0	1
상해	국제관계연구	0	0	0	1	0	5	0	6
상해	국제전망	0	0	0	0	0	2	1	3
동북	동북아연구	46	14	36	16	14	46	7	179
동북	경제총횡	23	6	0	0	0	0	2	31
동북	동북아론단	57	31	17	15	3	26	29	178
동북	사회과학전선	3	1	1	1	4	4	0	14
동북	사회과학집간	2	0	0	0	0	0	0	2
동북	학습여탐색	1	0	0	0	1	0	0	2
동북	흑룡강사회과학	4	13	0	1	0	0	1	19
합계		163	82	62	39	34	192	43	615

지역별 한반도 연구논문의 총량은 동북지역이 425편, 북경지역이 181편, 상해지역이 9편으로 2개 기관만 포함되었다. 연구논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해지역을 제외하면 동북지역의 한반도 연

구 관심도가 북경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II-2> 참조) 동북지역은 한반도(북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한반도 정세와 동북지역의 이해관계가 밀접한바 연구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북경지역은 국가차원에서 한반도 이외의 다양한 국제이슈에 접근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한반도에만 집중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그림 III-2 연구주제의 지역 간 비교



실제로, 북경과 동북지역의 연구주제를 비교한 <표 III-4>를 보면, 동북지역은 북경지역에 비해 한국 및 북한연구를 많이 수록하고 있는 반면, 북경지역은 동북지역에 비해 한반도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북경지역에 비해 동북지역의 논문 게재 편수가 2배 이상 많아 절대적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북경지역과 동북지역의 연구 주제별 게재 비중을 비교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 표 III-4 북경과 동북지역의 연구주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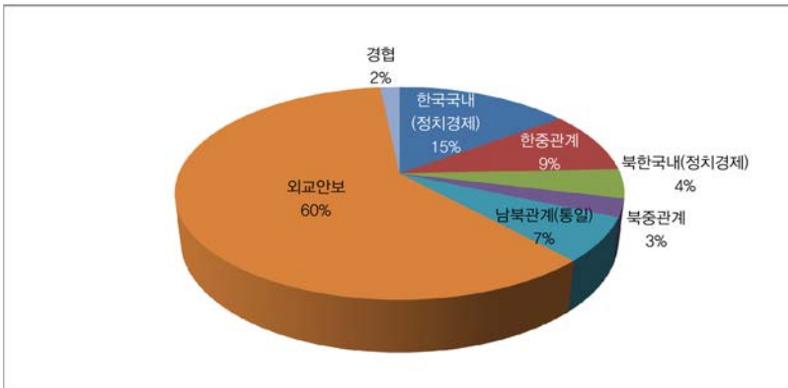
(단위: 편)

구분	한국		북한		한반도			합계
	한국국내 (정치경제)	한중 관계	북한국내 (정치경제)	북중 관계	남북관계 (통일)	외교 안보	경협	
북경	27	17	8	5	12	109	3	181
동북	136	65	54	33	22	76	39	425
합계	163	82	62	38	34	185	42	606

*상해(9편)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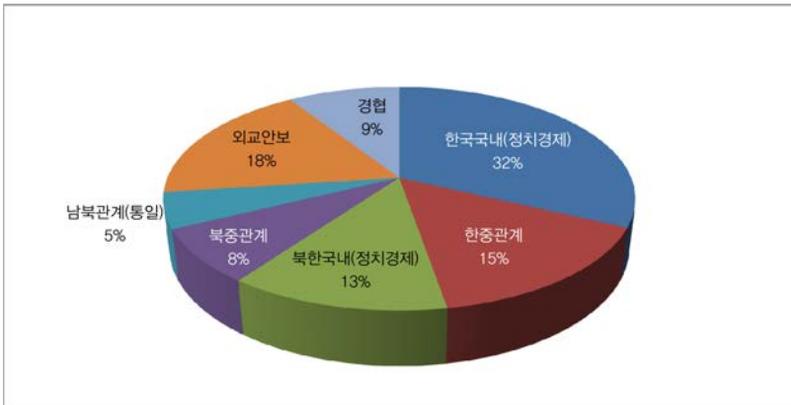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북경지역의 연구 주제별 비중을 표시한 <그림 III-3>에서 보듯이, 북경지역 연구주제별 비중은 외교안보(60%), 한국국내(15%), 한중관계(9%), 남북관계(7%), 북한국내(4%), 북중관계(3%), 한반도차원 경협(2%)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경지역은 북핵 및 6자회담 등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연구관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III-3 북경지역의 연구주제별 비중



반면에 <그림 III-4>에서 보듯이, 동북지역의 연구주제별 비중은 한국국내(32%)가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18%)를 상회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중관계(15%), 북한국내(13%), 한반도 차원 경험(9%), 북중관계(8%), 남북관계(5%)의 비중이 북경지역과 달리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동북지역의 간행물은 한반도 전반에 대한 연구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국내 문제 및 북중관계를 포함한 북한문제에 대한 논문비중이 동북지역의 경우 21%인데 비해 북경지역의 경우 7%에 불과한 점은 주목된다. 즉, 북경지역은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연구 관심이 압도적인데 비해, 동북지역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 관심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북한 관련 주제와 한반도 차원의 경험에 대한 연구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II-4 동북지역의 연구주제별 비중



I
II
III
IV

2. 한반도 전문가 현황

가. 현황분석

본 절에서는 14개 정책연구기관의 주요 간행물인 16개 학술지에 2002년부터 2012년(4월)까지 약 10년 동안의 한반도 관련 논문(총 615편)을 게재한 전문가 중, 북경, 상해,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는 14개 정책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과 한중 전문가의 복수 추천을 받은 연구자 총 56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명단은 <표 III-5>로 정리하였다.

● 표 III-5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 현황

(2012년 8월 현재)

지역	소속기관	기관명	전문가
북경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門洪華, 趙虎吉, 林曉光, 張璉瑰
		개혁개방논단	于美華
	국무원	중국사회과학원	朴鍵一, 朴光姬, 董向榮, 邵峰, 金英姬
		발전연구센터	王乃成
	외교부	중국국제문제연구소	虞少華, 劉俊波, 時永明, 晉林波, 楊希雨
		중국외교학원	王帆
	국가안전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戚保良, 楊伯江, 李軍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王宜勝
	대학	북경대학	朱鋒
		청화대학	楚樹龍
		인민대학	金燦榮, 時殷弘
		중국정법대학	韓獻棟

지역	소속기관	기관명	전문가
상해	상해시 정부	상해사회과학원	劉鳴, 劉阿明
		상해국제문제연구원	龔克瑜
상해	대학	복단대학	石源華, 任曉, 方秀玉, 汪偉民, 龔繼永
		동제대학	崔志鷹
동북	길림성 정부	길림성 사회과학원	劉亞政, 張英, 陳龍山, 張玉山, 周偉萍
	요녕성 정부	요녕성 사회과학원	金哲, 呂超
	흑룡강성 정부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孫永, 金美子
	대학	길림대학	張寶仁, 張慧智, 朴英愛, 任明, 徐文吉, 郭銳, 巴殿君
		연변대학	姜龍範, 金強一, 林今淑
		요녕대학	張東明
요동대학		滿海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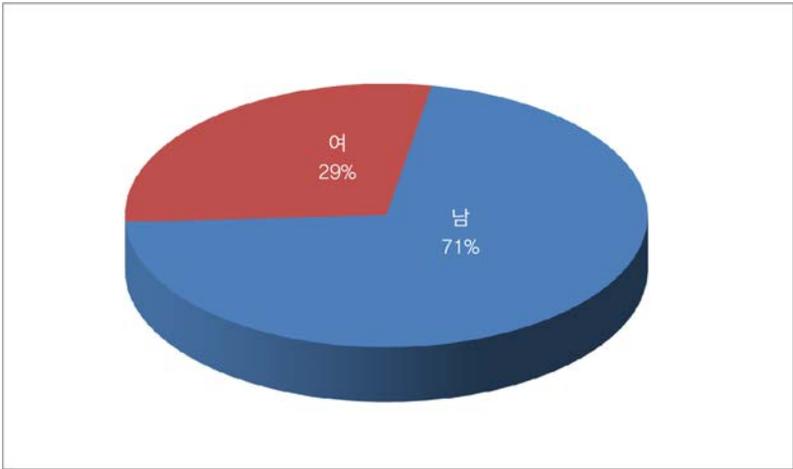
56명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현황 분석을 위해 조사, 활용한 기본 인적사항은 연령, 성별, 소속기관, 민족, 전공 등이며 이에 대한 조사는 주로 공개된 자료에 의존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주요 포털사이트인 바이두닷컴(www.baidu.com)과 세계적인 포털사이트인 구글(www.google.com) 및 중국의 최대 언론 사이트인 신화망(www.xinhuanet.com), 그리고 중국학술정보원 CNKI(www.cnki.net)에서 검색된 각 전문가들의 논문에 실린 저자 정보 등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은 각 전문가들이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적사항 및 전문가들의 개인 블로그에 공개된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한반도 전문가 56명 중 남성이 40명, 여성이 16명으로

I
II
III
IV

남녀비율은 약 7:3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북경 지역의 남녀 성비는 81(21명):19(5명), 상해지역은 70(6명):30(3명), 동북지역은 57(13명):43(8명)으로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전문가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북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전문가의 비중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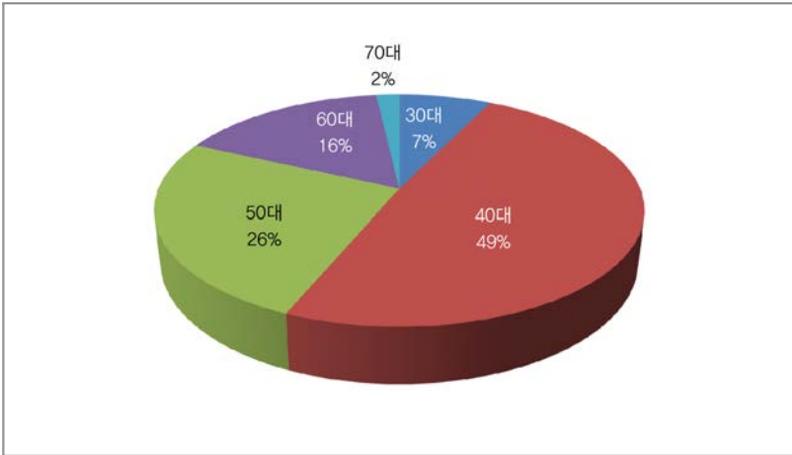
◉그림 III-5 한반도 전문가의 성별 분포



<그림 III-6>에 나타난 한반도 전문가의 연령 분포를 보면 조사 대상 56명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40대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14명, 60대 9명, 30대 4명, 70대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 구성은 40대에 왕성한 연구 활동을 보이다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이 저조해지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나, 조사 기간이 10년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세대별로 두텁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⁴⁹ 이러한 연령구성

은 지역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동북지역의 경우 60대 이상의 전문가 구성이 29%로 북경 12% 및 상해 11%보다 높게 나타나 동북지역의 한반도 전문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쇠한 특징을 보여 세대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6 한반도 전문가의 연령분포



<그림 III-7>과 <그림 III-8>은 한반도 전문가 56인의 기관 및 지역분포 현황을 보여준다. 먼저, 한반도 전문가의 기관별 분포 현황은 대학 소속이 52%(29명)으로 국책연구원 소속 전문가 48%(27명)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가 정부의 연구기관과 대학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9. 이와 관련, 한반도 연구 분야의 30대 후속세대의 발굴을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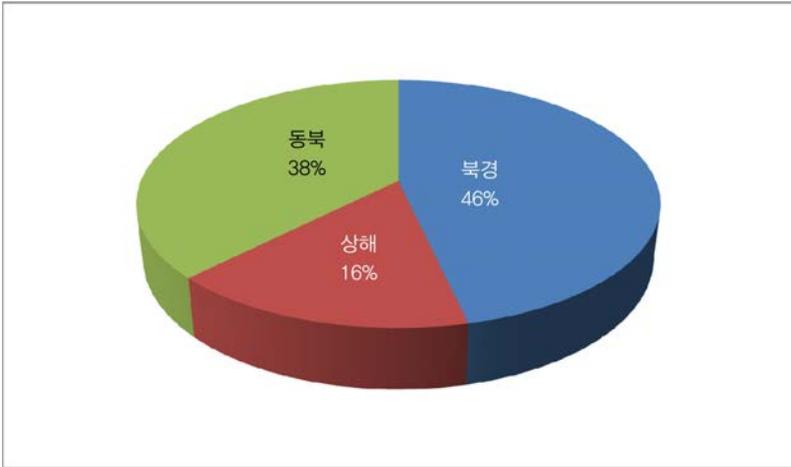
●그림 III -7 한반도 전문가의 기관별 분포



다음으로 한반도 전문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북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26명(46%)로 가장 많았고,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21명(38%)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상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는 가장 적은 9명(16%)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한반도 전문가가 상해지역보다 의외로 동북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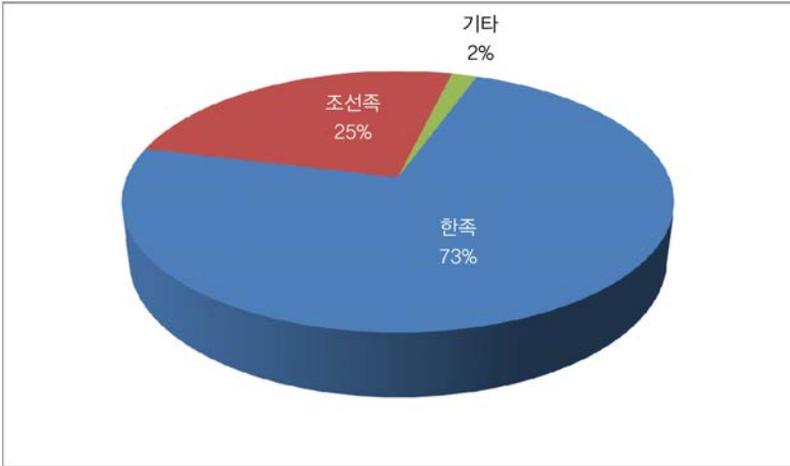
<그림 III-9>에 나타난 한반도 전문가의 민족별 구성을 보면, 몽골족 1명(陳龍山)을 제외할 경우 한족이 41명(73%)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족은 14명(25%)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표 III-6>참조). 비록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중 조선족의 비중은 적으나 중국의 민족구성을 감안하면 중국 내 한반도 연구에서 조선족의 역할이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전문가 중 지역별 조선족의 비중을 보면 의미 있는 결과도 발견된다.

●그림 III -8 한반도 전문가의 지역별 분포



즉, 북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전문가는 4명으로 15%의 비중을, 상해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전문가는 1명으로 10%의 비중을 불과한데 비해,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는 9명으로 전체 동북지역의 한반도 전문가 21명 중 약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북지역의 한반도 연구에서 조선족의 역할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선족 전문가의 연령별 구성은 40대가 64%를 차지하고 있어, 45%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 전문가에 비해 비교적 젊은 조선족 전문가가 다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선족 전문가 중 여성 전문가의 비중이 50%로 한족 전문가의 7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9 한반도 전문가의 민족별 분포



●표 III-6 중국내 조선족 출신 한반도 전문가 현황

지역	소속기관	전문가(14인)
북경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朴鍵一, 朴光姬, 金英姬
	중앙당교	趙虎吉
상해	복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한반도연구센터	方秀玉
길림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朴英愛, 任明
	연변대학	姜龍範, 金強一, 林今淑
요녕	요녕성 사회과학원	金哲, 禹穎子
	요녕대학	張東明
흑룡강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金美子

<그림 III-10>과 <표 III-7>에서와 같이 한반도 전문가의 전공별 비중을 보면, 지역연구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전문가가 30명(54%)으로 국제관계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전문가 22명(39%)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동북지역의 전체 연구자 21명 중 14명(70%)이 지역연구자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으나 북경과 상해는 국제관계와 지역연구 전공자의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동북지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역연구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이 농후한 반면, 북경과 상해 지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국제관계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이 더 강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족 전문가의 연구경향과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다. 조선족 전문가 14명 중 13명이 지역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바, 조선족의 언어, 문화적 장점과 남북한과의 인맥을 활용한 현지조사와 정보획득에 유리한 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림 Ⅲ-10 한반도 전문가의 전공별 분포



- I
- II
- III
- IV

● 표 III-7 전공별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현황

지역	국제관계 차원에서 한반도 연구(22인)	한반도 지역 전문가(30인)
북경	楚樹龍, 金燦榮, 時殷弘, 王帆, 朱鋒, 楊伯江, 門洪華, 劉俊波, 時永明, 晉林波, 楊希雨, 林曉光, 邵峰	戚保良, 虞少華, 張璉瑰, 王宜勝, 于美華, 李軍, 王乃成, 朴鍵一, 朴光姬, 金英姬, 趙虎吉, 韓獻棟
상해	劉鳴, 劉阿明, 龔克瑜, 任曉, 汪偉民	崔志鷹, 方秀玉, 石源華, 鄭繼永
동북	劉亞政, 周偉萍, 巴殿君, 姜龍範	金哲, 張東明, 滿海峰, 張英, 陳龍山, 張玉山, 金強一, 林今淑, 孫永, 金美子, 張慧智, 朴英愛, 任明, 徐文吉

나. 연구관심도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인 한반도 전문가 56명이 게재한 225편의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이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연구관심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자 개인별 발표논문을 7개의 세부 주제별로 분류한 후 해당 연구자를 1로 표기했다. 즉, A 연구자의 논문이 한중관계에 해당하면 해당 논문 편수와 상관없이 1로 표기했다. 만일 B 연구자의 논문이 한중관계와 북중관계로 분류되면 해당 세부 주제에 각각 1로 표기했다. 어떤 연구자의 여러 논문이 하나의 세부 주제에 집중되면 1로 표기되지만 또 다른 연구자의 여러 논문이 각기 2~3개의 세부 주제로 분류되면 각각의 해당 주제 모두에 1로 계산했다.

● 표 III-8 한반도 전문가의 연구주제 관심도

(단위: 명)

조사대상 학자	한국		북한		한반도		
	한국 국내	한중 관계	북한 국내	북중 관계	남북 관계	외교 안보	경협
북경(26)	5	5	6	3	4	18	0
동북(21)	8	6	9	12	3	9	6
상해(9)	3	1	0	0	1	8	0
합계(56)	16	12	15	15	8	35	6

이를 종합한 것이 <표 III-8>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국내 및 한중관계), 북한(국내 및 북중관계)보다 한반도(남북관계, 외교안보, 경협) 차원의 주제에 대한 연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56명 중 한국국내 및 한중관계 관련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은 16명과 12명으로 북한국내 및 북중관계 관련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 각 15명과 대동소이하나 남북관계(통일), 외교안보, 경협 등 한반도 차원의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는 각각 8명, 35명, 6명이었다. 한반도 차원의 연구주제 내에서 보면 남북관계(통일)를 연구한 학자가 56명 중 8명, 한반도 차원의 경협문제를 발표한 학자가 56명 중 6명이나 북핵 등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 이슈를 다룬 학자는 56명 중 35명으로서 이 주제에 대한 연구관심도가 가장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국내, 한중관계, 북한국내, 북중관계 등의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의 수는 대체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북경지역의 경우 전체 26명의 학자 중 외교안보 18명, 북한국내 6명, 한국국내 및 한중관계에 각 5명, 남북관계 4명, 북중관계는 가장 적은 3명이 논문을 발표했다. 따라서 북경지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과 6자회담 등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 이슈에 가장 높은 연구 수행도를 보인 반면, 북중관계 연구에는 가장 적은 관심을 보였다.

동북지역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21명 중 북중관계에 12명, 외교안보 및 북한 국내에 각 9명, 한국국내문제에 8명, 한중관계 및 경제에 각 6명, 남북관계에 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동북지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중관계에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외교안보 및 북한 국내로 조사되었다. 이 역시 동북지역의 이해관계가 연구관심도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상해지역의 경우 조사 대상 9명의 학자 중 북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학자는 없었으나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 이슈를 다룬 학자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국내 관련 주제를 연구한 학자가 3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상해지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차원의 주제, 그 중에서도 북핵 등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가장 높은 연구관심도를 보인 반면, 북한 관련 연구에는 가장 낮은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개인별 연구주제 관심도는 아래 <표 III-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2개의 세부 영역을 연구하거나 3~4개 이상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 개인별로 연구경향을 명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지역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경우는 한반도 연구를 다양하게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며, 국제관계 차원에서 한반도문제를 연구하는 경우는 한반도의 외교안보 이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부 연구영역별로 상대적인 연구관심도를 보이는 한반도 전문가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즉, 한국 국내문제의 경우 董向榮(6

편), 張玉山(5편)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으며, 한중관계의 경우에는 徐文吉(3편), 金美子(3편)가, 북한 국내문제의 경우에는 陳龍山(5편), 張慧智(5편), 徐文吉(5편)이, 북중관계의 경우에는 朴光姬(4편), 張玉山(4편)이, 남북관계(통일)의 경우에는 李軍(3편), 林今淑(3편)이, 외교안보의 경우에는 朱鋒(12편), 林曉光(7편), 王乃成(5편), 楊伯江, 韓獻棟, 巴殿君(이상 4편) 등이, 한반도 차원의 경험의 경우에는 張慧智(3편), 張寶仁(2편), 徐文吉(2편) 등을 꼽을 수 있다.

● 표 III-9 전문가별 논문게재 건수

	한국		북한		한반도		
	국내	한중관계	국내	북중관계	남북관계	외교안보	경험
金燦榮			1			1	
時殷弘						1	
朴鍵一		2	1	1		2	
朴光姬		1		4			
董向榮	6	2	1				
邵峰				1		1	
金英姬	1			1			
朱鋒						12	
戚保良						2	
楊伯江						4	
李軍	4		1		3	2	
于美華					1		
門洪華						1	
張琺瑰					1		
趙虎吉	1			1			

I
II
III
IV

	한국		북한		한반도		
	국내	한중관계	국내	북중관계	남북관계	외교안보	경협
虞少華		1				3	
劉俊波			1			3	
時永明						1	
晋林波						1	
楊希雨						1	
王宜胜		1	1			1	
楚樹龍						1	
王帆						1	
韓獻棟	3					4	
龚克瑜						2	
劉鳴						3	
劉阿明						1	
石源華						2	
任曉		1			1	2	
方秀玉					1		
汪偉民	2					3	
鄭继永	2					1	
崔志鷹	3					3	
金哲				2			
呂超				1		1	
張東明				1			1
滿海峰				1			
劉亞政			1				
張英	3		1				
陳龍山			5	2	1	3	

	한국		북한		한반도		
	국내	한중관계	국내	북중관계	남북관계	외교안보	경협
張玉山	5	1	3	4	2	2	
周偉萍		1					
張宝仁	1	1	4	1			2
張慧智	2		5	1			3
朴英愛	3					1	1
任明	3						
郭銳	1		2	3		2	
徐文吉	1	3	5	1	2	1	2
姜龍范				2		1	
金强一						1	1
林今淑			2	3			
孫永		2		1			
金美子		3					
王乃成					1	5	
巴殿君						4	
林曉光						7	

다. 언론출연 빈도분석

언론에 대한 통제력이 강한 중국정치체제의 특성상 정책연구기관은 정부정책 방향의 대외 홍보 및 확산,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여론형성 및 유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언론 출연빈도는 전문가별 대외적 지명도 및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주요 대상자인 한반도



전문가 총 56명의 언론출연 빈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을 소개하면, 조사기간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중국의 전국적인 중앙 언론매체인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를 대상으로 각 전문가들이 언급된 기사의 총수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언론매체의 홈페이지와 뉴스 검색엔진인 Panguso(www.panguso.com)와 CNKI의 신문검색(www.cnki.net) 기능을 활용하였으며 각 전문가들의 이름을 검색어로 하여 도출된 인터뷰 기사와 기고문, 영상자료 등에서 동명이인과 관련된 내용과 중복된 자료를 제외한 후 그 총수를 세어 기록하였다. 그 결과가 <표 III-10>이다.

●표 III-10 전문가별 중앙언론기관 노출 총 횟수

전문가명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	합계
金燦榮	9	12	0	21
時殷弘	2	0	10	12
朴鍵一	1	1	9	11
朴光姬	1	2	0	3
董向榮	0	2	0	2
邵峰	0	1	0	1
金英姬	0	1	0	1
朱鋒	5	3	18	26
戚保良	2	0	0	2
楊伯江	26	3	17	46
李軍	0	0	1	1
于美華	0	0	0	0
門洪華	0	0	0	0

전문가명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	합계
張琏瑰	0	0	4	4
趙虎吉	0	0	0	0
虞少華	0	0	0	0
劉俊波	0	0	0	0
時永明	0	0	0	0
晋林波	8	0	0	8
楊希雨	1	1	74	76
王宜胜	3	0	0	3
楚樹龍	3	1	0	4
王帆	20	2	2	24
韓獻棟	3	2	0	5
龔克瑜	8	0	0	8
劉鳴	0	0	1	1
劉阿明	0	0	0	0
石源華	0	0	2	2
任曉	0	0	0	0
方秀玉	8	0	1	9
汪偉民	0	0	0	0
鄭继永	2	0	0	2
崔志鷹	7	0	0	7
金哲	0	4	0	4
呂超	0	0	0	0
張東明	0	0	0	0
滿海峰	0	0	0	0
劉亞政	6	0	0	6
張英	1	0	0	1

I
II
III
IV

전문가명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	합계
陳龍山	1	0	0	1
張玉山	34	0	0	34
周偉萍	1	0	1	2
張宝仁	0	0	0	0
張慧智	0	0	0	0
朴英愛	1	0	0	1
任明	0	0	0	0
郭銳	1	0	0	1
徐文吉	5	0	1	6
姜龍范	0	0	0	0
金强一	0	0	0	0
林今淑	0	0	0	0
孫永	0	0	0	0
金美子	0	0	0	0
王乃成	1	0	0	1
巴殿君	1	0	0	1
林曉光	0	0	0	0

조사 대상 56명 중 중앙 언론매체에 노출된 횟수가 0인 전문가는 21명이었고 1회 이상인 전문가는 35명이었다. 그 중 가장 많은 횟수를 보인 전문가는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인 양시위(楊希雨)로 총 76회를 기록하였다. 2위는 46회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양보장(楊伯江)이었으며, 3위는 34회인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장위산(張玉山)이었다. 장위산의 경우는 지방에서 활동함에도 전국성의 중앙 언론매체에 자주 출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조사

기간 중 김정일의 방중이 수 차례 있었고, 대부분 동북지방을 경유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중앙 언론매체의 출연빈도가 10회 이상인 상위 랭커는 모두 북경지역 전문가들로서 이들은 대중매체에 대한 지명도 및 영향력을 일정 수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북경대학 교수 주펑(朱鋒: 26회), 외교학원 교수 왕판(王帆: 24회), 인민대학 교수 진찬룡(金燦榮: 21회), 인민대학 교수 스인홍(時殷弘: 12회), 중국 사회과학원의 파오젠이(朴鍵一: 11회) 등이 있다. 한편, 상해지역의 경우 지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앙 언론매체에 팡슈위, 공커위, 추이즈잉 등이 각각 9회, 8회, 7회로 출연한바, 이들의 지명도와 대중에 대한 영향력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평가와 한계

이상에서 한반도 관련 중국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관심도와 대중 영향력을 측정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비교·평가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정책연구기관의 내부 문건 등에 대한 접근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영향력과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가. 평가

일반적으로 싱크탱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크게 싱크탱크의 자체 규모와 수준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주종을 이룬다. 영향력의 경우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과 엘리트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대중에 대한 영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⁰ 정책연구기관은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내부 보고나 정책자문 등을 통해 정책결정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의 정책연구기관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⁵¹ 다만 당-국가체제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체제 성격 상 당과 중앙의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접근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정책연구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민간보다 반관반민(대학)이, 반관반민보다 관변(국책)의 정책연구기관이 더 높은 정책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중 당과 국가기관의 산하에 있는 개혁개방논단,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상해사회과학원, 상해국제문제연구원, 요녕성 사회과학원, 길림성 사회과학원,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등이 반관반민 성격의 북경대학 국제전략연구센터, 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국제전략학회,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등보다 상대적으로 정책적 접근도와 영향력이 높다.

⁵⁰ 주쉬핑 교수는 정책연구기관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중앙이나 부문의 지시 정도와 정부 정책자문회의에 대한 참여 수준을 통해 분석하였고, 엘리트에 대한 영향력을 중문 핵심 잡지 발표 논문 수와 국내외 학술회의 참여 정도로 평가하였으며,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성과의 언론매체 노출 정도와 매체 인터뷰 참여 정도로 측정하는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朱旭峰, 『中國思想庫:政策過程中的影響力研究』(北京:清華大學出版社, 2009) 참조.

⁵¹ 대표적인 사례로 장쩌민에 의해 발탁되어 후진타오의 정책브레인으로 알려진 상해 복단대의 왕후닝(王扈寧) 교수를 들 수 있다.

관변 정책연구기관 중에는 지방정부의 산하에 있는 기관보다 중앙정부의 산하에 있는 기관이, 중앙정부의 산하 기관보다 당 직속 기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정책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부문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수렴을 위해 비공식 통로를 활용하는 추세에 있어 대학 연구기관들의 정책적 접근도와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지역별 특징을 분석하면 중앙정부와의 밀접성 때문에 북경지역의 정책연구기관이 상해나 동북지역의 정책연구기관보다 정책적 접근도나 영향력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북경지역의 정책연구기관은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 이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로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 점은 북경 지역의 정책연구기관들이 중앙정부의 관점 및 국가적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동북지역의 정책연구기관은 한반도 전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관심을 갖고 있고, 주로 지역연구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특히, 동북지역의 경우 타 지역보다 북한 및 북중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이는 지리적 인접성과 빈번한 접촉으로 인한 북한의 동향 파악은 물론, 동북지역개발과 연계된 북중 협력관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의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동북지역 정책연구기관의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나,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향후 동북지역 정책연구기관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을 연구하고 통일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I
II
III
IV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데 공식적·제도적 통로와 비공식적 통로를 활용해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분석한대로 중국의 대외정책은 당·정·군의 수장들이 참여하는 의사협조기구인 외사영도소조에서 이루어지는바, 여기에 참여하는 각 부서의 산하 정책연구기관들은 정책제언의 통로와 기회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당 산하에 있는 개혁개방논단, 국무원 직속기구인 중국사회과학원, 국가안전부 산하 기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외교부 산하 기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인민해방군 직속기구인 군사과학원 등이 타 기관보다 정책적 영향력 면에서 우위에 있다. 이들 기관 중에 당 산하에 있는 개혁개방논단의 역할이 중요하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관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다. 정책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의 지분이나 의견이 반영되며 때로는 기관 간의 경쟁도 이루어진다.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 역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루어진다. 다만, 북핵 실험이나 김정일 사후 대응과 같이 비교적 긴요한 사안에서부터 일상적이거나 파급력이 약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중미관계나 국제정세 등 국제관계의 하위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각 정책연구기관은 부설 한반도 전문 연구부서나 전문가가 동원된다. 구체적으로 각 정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정부에서 위탁하거나 자체 조사한 정책연구와 보고서를 통해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거나 정책건의를 하며 기관장은 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산하의 연구원들은 정책연구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거나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당 정치국 집체학습에 강사로 초빙되기도 한다.

다만 16대 이후 17대(2010년 2월까지) 동안 개최된 총 63차례의

집체학습 중 한반도문제를 주제로 선정한 경우는 없고, 주로 세계 질서와 관련된 주제를 채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중국 사회과학원의 위용딩(余永定), 장위옌(張宇燕), 리상양(李向陽)과 외교학원 친야칭(秦亞青) 등 국제관계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세계경제정세, 국제체제, 경제글로벌화, 중국안보를 주제로 강의한 바 있다.⁵² 그런 점에서 한반도 지역전문가보다 국제관계 전문가의 견해가 중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책연구기관들은 산하에 한반도 관련 연구실을 신설하거나 전문가의 꾸준한 양성을 통해 정부정책의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산하에 한반도 관련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개혁개방논단,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상해사회과학원 및 동북3성 사회과학원 등이다. 이는 중국에서 한반도 연구의 중요성과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밖에 각 정부부문에서도 분야별 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있다. 외교부의 경우 중요 정책연구기관 및 대학과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정책분석회의와 각종 자문회의를 주재한다.⁵³ 2011년의 경우 외교부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약 1/4에 해당하는 8명을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학자와 전문가 개인의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적 통로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소속기관에 의해 구성되거나 학자와 전문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형

52- 中共研究雜誌社, 『2010中共年報』(臺北: 中共研究雜誌社, 2010), pp. 49~56.

53- 孫哲, “中國外交思想庫:參與決策的角色分析,” 『復旦學報(社會科學版)』, 第4期(2004), pp. 100~106.

성되기도 한다. 정책연구기관의 외교정책에 대한 영향력 수준이나 방식, 특정 영역이 작용하는데 주로 연구자 개인의 연구능력이나 영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러한 비공식 통로를 구축하는데 다음 두 개의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⁵⁴

첫째, 퇴직한 고위급 외교관료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이다. 전임 외교관은 풍부한 외교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인맥과 활동력을 갖고 있어 이들의 기관장 부임은 해당 기관의 영향력을 향상시킨다. 대표적인 예로 전 국무위원인 탕자쉬앤이 명예원장으로 부임한 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을 들 수 있으며 양제츠 외교부장의 친동생인 양제몐이 기관장으로 부임한 상해국제문제연구원도 이와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우수한 학자들의 초빙이다. 정책연구기관들은 중국의 주요 대학 인재들이나 해외 유명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적극적으로 초빙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교학원 상무부원장인 친야칭,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자칭궈(賈慶國), 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장 옌쉐통(閻學通),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인 추수룡 등이 그렇다. 고위층의 정책브레인으로 알려진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장 왕지스도 해외 박사는 아니지만 옥스퍼드나 미시건에서 방문학자로 재직하면서 경험을 구축한 경우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선진 이론을 습득하고 해외 학계와 깊은 연계를 이루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 해당 기관의 정책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북경지역의 관변 정책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국제관계 전문가의 견해가 비중 있게 반영되

54. 王存剛, “當今中國的外交政策:誰在制定?誰在影響?,” 『外交評論』, 第2期(雙月刊)(2012), pp. 13~14.

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북경지역의 정책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타 지역에 비해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 이슈에 높은 연구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도 상통한다. 또한, 앞에서 조사한 한반도 전문가의 대외적 영향력을 가늠하는 전국성 중앙언론 출연빈도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조사결과 상위 랭커들 대부분은 북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자 국제관계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 연구자들이었다.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서 한반도의 중요성과 비중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질서와 중미관계의 하위에서 한반도 정책이 결정·운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반도 지역 전문가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한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뛰어난 언어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긴밀한 인맥 및 학맥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반도 연구와 정책 기여도에서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북경지역의 정책적 영향력이 높은 정책연구기관의 한반도 연구센터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거나, 동북지역에서 지방 정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에 일정한 기여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중국정부가 북중양자관계 및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동북지역의 한반도 전문가와 조선족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들에 대한 적절한 평가도 요구된다.

나. 한계

중국의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증대된 역할과 기능에도 불

구하고 한계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한계로는 독과점 체제, 독립성과 자율성의 부재, 재정부족, 정책적 접근도의 제약 등이 거론된다.⁵⁵ 그러나 이는 미국의 정책연구기관과의 비교를 전제로 한다. 특히,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독과점 체제나 독립성 및 자율성의 부재는 중국의 정치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며, 이 점은 오히려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정책적 접근도와 영향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관련 중국의 정책연구기관과 전문가들도 이러한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중국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부재와 독과점 체제에서 오는 제한된 경쟁은 중국 정책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한반도 연구가 대부분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방향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이어진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더 주목되는 연구결과를 생산할 수 있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한다. 또한, 한반도 연구가 국제관계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점도 그렇다. 물론, 중국의 국가이익과 관심에서 한반도의 비중과 위상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창의적인 연구개발이 중국의 국익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독립성 및 자율성과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재정 부족도 발전을 제약하는 측면이다. 중국의 관방 정책연구기관 특성상 일반 재정 항목에 포함되는 특화된 연구경비가 확보되

⁵⁵- Xuanli Liao, *Chinese Foreign Policy Think Tanks and China's Policy Towards Japan*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06), p. 38; 林祐瑄, “當前中國智庫發展要況述評,” 『中共研究』, 43卷 10期 (2009), pp. 87~89.

지 못한 경우 또는 정책연구기관의 재정 확보가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정책연구에 나서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⁵⁶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물론, 일부 대학 정책연구기관 가운데 다수의 한반도연구센터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의 국제학술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장기간 지속적인 재정 확충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제교류기금, 미국의 포드기금 등도 중국의 정책연구기관에 학술지원사업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재정 확충노력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이다. 일방적 지원보다 상호 이해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한중 공동연구의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와 한국의 중국 전문가의 시각을 확대하고 연구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은 정책의 생산 기능보다는 생산된 정책의 유통과 확산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고 전파하는데 치중하여 정책연구기구 본연의 기능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⁵⁷ 그 결과 정책연구기관의 지위는 정책생산과 확산이라는 기구 자체의 조직적이며 제도적인 차원보다는 해당 연구자나 정책연구기관 책임자의 정치적 지위나 역할에 주로 기댄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기관과 전문가의 개별

56- 國務院發展研究中心人力資源研究培訓中心, “地方政府政策研究機構及人才隊伍狀況調查,” p. 18.

57- 王志存, “試析當代中國思想庫的特點和攻能,” pp. 11~12.

적 노력만이 아닌 중국정부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정책연구기관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경비지원과 운영 및 관리 방식에 대한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향후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재정성이 견실한 방향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민간 싱크탱크의 등장 및 발전에 따른 다양성과 경쟁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결론 및 과제

이상에서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과 전문가에 대한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반도 관련 중국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와 한중 간 1.5 트랙 및 민간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반도 관련 정책적 영향력이 비교적 큰 북경과 상해, 동북지역에 포진해 있는 14개 정책연구기관의 현황을 소개하고 14개 정책연구기관의 16개 주요 공개간행물에 나타난 연구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지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 56명을 추출해 그 현황을 분석하고 한반도 전문가의 개별 연구관심도와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중국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연구기관의 개념, 발전, 역할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재한 측면을 제외하고 정책연구에 종사하면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국의 정책연구기관도 미국 등 일반 국가에서 규정하는 정책연구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관변 정책연구기관은 1949년 이후 태동기, 복원기, 형성기, 성장기를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Ⅲ장의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볼 때 중국의 주요 정책연구기관은 한반도 전문 연구부서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북경지역에 위치한 정책연구기관이 상해 및 동북지역의 정책연구기관보다 정책적 영향력 면에서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외정책에 포함된 한반도 정책 역시 의사협조기구인 외사영도소조에서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바, 이 과정에 공식적, 제도적 통

I
II
III
IV

로가 보장된 관변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정책적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비공식적 통로를 활용하는 대학의 정책연구기관도 최근 영향력을 높이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연구기관의 간행물에 나타난 중국의 한반도 연구경향성은 북핵문제 등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한국의 국내 상황이었으며, 북중관계나 남북관계(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관심은 가장 낮았다. 북경지역은 중앙정부의 입장 및 국가이익 차원에서 국제관계의 틀로 한반도 연구에 접근하는 반면, 동북지역의 정책연구기관의 한반도 연구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한반도 전반에 대한 지역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북한 국내 및 북중 협력관계에 상대적으로 깊은 연구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 점은 북경지역과 동북지역의 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에 참고할만한 내용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볼 때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한족(73%)이 조선족(25%)보다 많고, 40대, 50대, 60대 순의 연령분포를 보였으며, 국제관계(39%) 전공자보다 지역연구 전공자(54%)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동북지역에는 여성, 조선족, 지역연구 전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북경지역은 국제관계 전공자와 남성 및 한족의 비중이 더 높았다. 개별적 연구관심도도 북경지역은 한반도 차원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가장 압도적이었으며, 동북지역은 북한 국내 및 북중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관심도를 보였다. 중앙매체의 출연빈도에서 나타난 한반도 전문가의 대외지명도 및 대중 영향력은 북경지역의 정책연구기관, 예를 들면 중국국제문제연구소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연구원과 대학의 교수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바, 향후 교류협력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은 중국 정책연구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내부 정책결정 구조 및 한계이다. 또한, 중국 정책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정책연구와 보고를 통한 정책제언의 역할 뿐만 아니라 대외홍보 및 국제창구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연구기관 간의 경쟁도 제한적이거나 유의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향후 민간성 정책연구기관의 발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경지역의 정책연구기관, 특히 관변 정책연구기관의 정책적 영향력이 높다는 점, 한반도 지역연구자보다 국제관계 전공자의 영향력이 더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만, 동북지역 소재 정책연구기관의 정책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연구나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획일적인 교류협력보다 맞춤형의 방식이 좋으며, 최근 중국정부도 비공식적 통로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정책자문을 활용하는 추세에 있는바, 대학의 연구기관이나 유망한 연구자에 대한 개별적 교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기존 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고는 하나 여전히 다양한 부분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바, 본 연구를 계기로 국내의 주요 정책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과 전문가들에 대한 자료와 이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와 교류협력을 진행함으로써 한중 간 신뢰 증진과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흥규. 『중국 국제정치 분야 싱크탱크 연구: 후진타오 시기를 중심으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10.

윤경우. 『중국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 명부』.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이상국 외.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안보·국방정책 결정 메커니즘 분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Rich, Andrew.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Wang, Jisi. "China's Changing Role in Asia," Kokubun Ryosei and Wang Jisi (eds.). *The Rise of China and a Changing East Asian Order*. Tokyo: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2004.

Li, Zong et al. "Xin Zhongguo guoji wenti yanjiu 50 nian,"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ed.). *Xin Zhongguo shehui kexue 50 nian*. Beijing: China Social Science Press, 2002.

Radio Press. *CHINA DIRECTORY*. 神奈川: Radio Press, Inc., 2009.

Liao, Xuanli. *Chinese Foreign Policy Think Tanks and China's Policy Towards Japan*.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06.

李安方·王曉娟·張屹峰·沈桂龍. 『中國智庫競爭力建設方略』. 上海: 上

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0.

朱旭峰. 『中國思想庫:政策過程中的影響力研究』.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9.

中共研究雜誌社. 『2010中共年報』. 臺北: 中共研究雜誌社, 2010.

2. 논문

양갑용. “정책창출 기제로서 중국의 싱크탱크: 유형과 특징.” 은종학
역음. 『현대 중국의 지식생산 구조』. 서울: 도서출판 길, 2012.

_____. “중국 외교정책 생산기제와 싱크탱크-조어도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52권(한국외국어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2011.

_____. “중국 싱크탱크의 유형과 특징.” 『한중사회과학연구』. 제9권
제3호(한중사회과학학회), 2011.

이문기. “중국싱크탱크의 현황과 역할 변천 연구.” 국민대학교 중국
인문사회연구소 국내학술대회, 2012.

이희옥.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
소 초청포럼, 2011.

한석희. “중국에서의 한반도연구: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연구를 중
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 2003.

Mi, Na. “Exploring The Political Roles of chinese Think Tanks:
A Case Study of china’s Three Gorges Project Decision-
Making.” M.A. dissertation. The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2008.

Shambaugh, David. “China’s International Relations Think Tanks:

Evolving Structure and Process.” *The China Quarterly*.
Vol 171, September 2002.

Roy, Denny. “China’s Reaction to American Predominance.”
Survival. Vol. 34, No. 3, 2003.

Zhu, Xufeng. “The Influence Of Think Tanks In The Chinese Policy
Process.” *Asian Survey*. Vol. XLIX, No. 2, 2009.

宏觀經濟管理編輯部. “第二屆全球智庫峰會在京舉行.” 『宏觀經濟管
理』. 第7期, 2011.

國務院發展研究中心人力資源研究培訓中心. “地方政府政策研究機構
及人才隊伍狀況調查.” 『調查研究報告』. 第12號(總3767號),
2011.

山東社會科學院課題組. “論地方社科院向新型智庫的轉型.” 『社會科
學管理與評論』. 第1期, 2011.

徐曉虎·陳圻. “智庫研究的歷史演進及基趨勢.” 『重慶社會科學』. 第8期
(總201期), 2011.

孫哲. “中國外交思想庫:參與決策的角色分析.” 『復旦學報(社會科學
版)』. 第4期, 2004.

楊玉良. “大學智庫的使命.” 『復旦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2012.

王宏源. “創新地方社科院新智庫人才隊伍建設的思考.” 『社會科學管
理與評論』. 第1期, 2012.

王莉麗. “美國公共外交中的智庫的功能與角色.” 『現代國際關係』. 第
1期, 2012.

王存剛. “當今中國的外交政策:誰在制定?誰在影響?.” 『外交評論』. 第
2期(雙月刊), 2012.

王志存. “試析當代中國思想庫的特點和攻能.” 『重慶科技學院學報(社

- 會科學版』. 第4期, 2010.
- 劉寧. “智庫的歷史演進, 基本特征及走向.” 『重慶社會科學』. 第3期(總第208期), 2012.
- 劉穎. “近年來美國智庫的當代中國研究狀況.” 『理論月報』. 第5期, 2012.
- 林祐瑄. “當前中國智庫發展要況述評.” 『中共研究』. 43卷 10期, 2009.
- 傅廣宛·劉曉永·毛志凌. “我國政府決策機制的變遷與思想庫的發展.” 『當代世界與社會主義』. 第1期, 2011.
- 趙志耘·楊朝峰. “中美思想庫比較研究.” 『中國軟科學』. 第7期, 2011.
- 朱四海. “全球經濟治理與中國現代智庫的責任.” 『發展研究』. 第2期, 2012.
- 陳雙梅. “智庫建設的困境擺脫與國家軟實力提勝.” 『重慶社會科學』. 第95期(總第210期), 2012.
- 陳一新. “黨委核心智庫建設的理論與實踐問題.” 『政策瞭望』, 2012.
- 鄒文光. “我國政府決策中的思想庫建設研究.” 華南理工大學 碩士論文, 2010.

3. 기타자료

- 개혁개방 논단 관계자 인터뷰. 2011년 1월.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 2012년 9월.

McGann, G. James. “The Global Go-To Think Tanks.” <<http://www.fpri.org/research/thinktanks/GlobalGoToThinkTanks2010.pdf>>.

McGann, G. James. "The Global Go To Think Tanks Report 2011."
pp. 16-17 <[http://repository.upenn.edu/cgi/viewcontent.cgi?
article=1005&context=think_tanks](http://repository.upenn.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5&context=think_tanks)> (검색일: 2012.9.7).

『人民日報』.

<<http://baike.baidu.com/view/1799376.htm>>.

<<http://news.sina.com.cn/o/2006-11-10/094210462854s.shtml>>.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9-01/31/content_1073933
2.htm](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09-01/31/content_10739332.htm)>.

<<http://www.chinathinktank.com>>.

<[http://www.foreignpolicy.com/files/2008_Global_Go_To_Think
_Tanks.pdf](http://www.foreignpolicy.com/files/2008_Global_Go_To_Think_Tanks.pdf)>.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1)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11)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험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1)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2)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3)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근,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3,000원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1)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논총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1, No. 2 (2012)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 외	23,500원

기타

2010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회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연례정보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근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의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F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nk Pyo, Hwang Sun Hye
-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기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중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연구총서 12-09

www.kinu.or.kr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 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양갑용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